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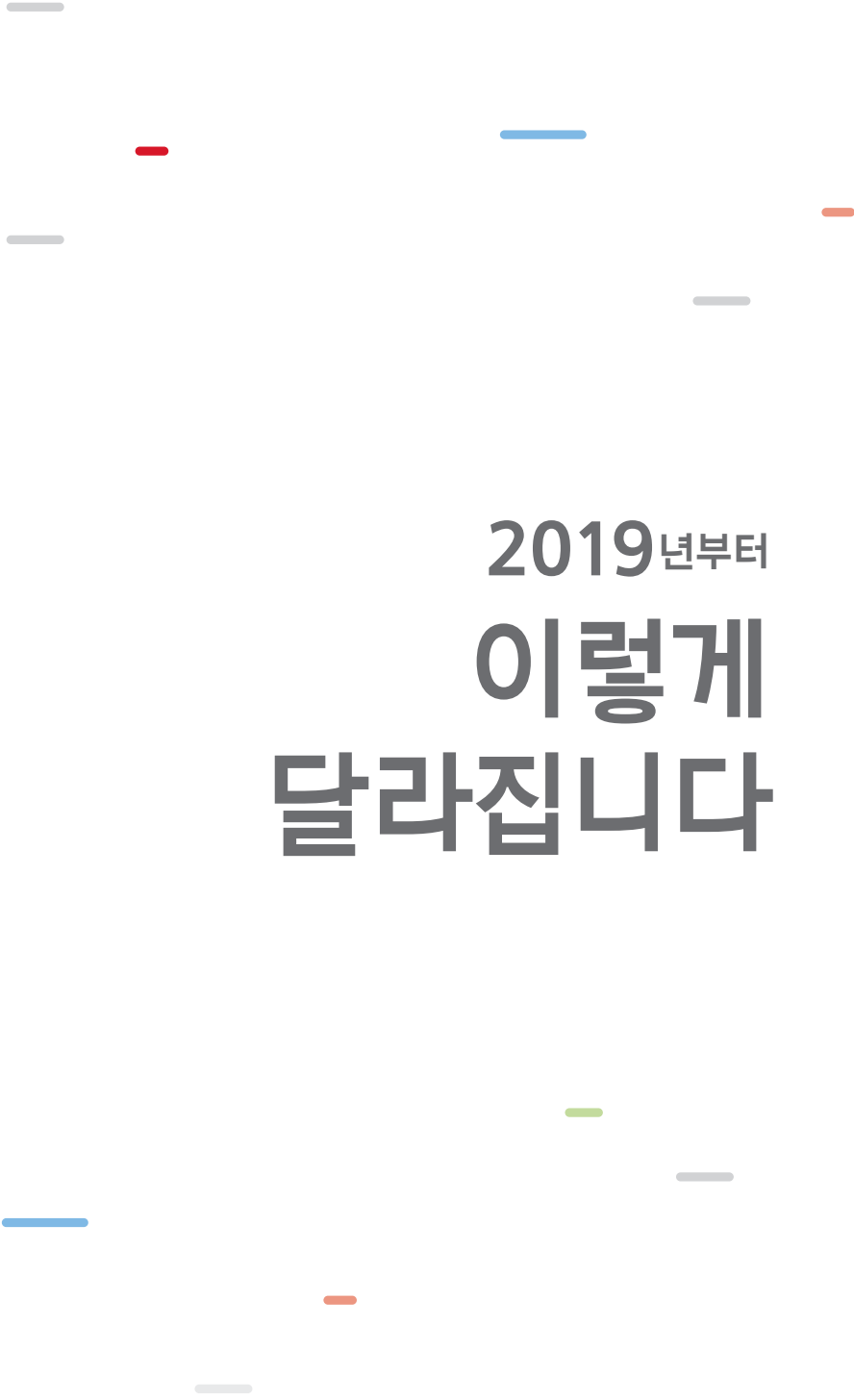
아름다운 山河 응비하는 생명의 삶터, 천년 전북!

2019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2019년 이렇게 달라집니다!』는
각종 법령, 조례 개정으로 달라지는 제도와
도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개선하는
주요 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본 책자는
도내 14개 시·군 민원실 등에 비치하고
전라북도 홈페이지(<http://jeonbuk.go.kr>)를 통해
도민 누구나 열람할 수 있습니다.



2019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목 차 CONTENTS

I. 세제·부동산

01 지방세 체납 가산금 인하.....	7
02 신혼부부 생애최초 구입 주택 감면.....	8
03 위기지역 내 중소기업 감면 신설.....	9
04 지방세 세무조사 제도 개선.....	10
05 종이 수입증지 민원서비스 개선.....	11

II. 재난안전·소방

01 승강기 업종 세분화 및 안전관리 책임 강화.....	15
02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제 시행.....	16
03 폭염·한파로 인한 피해 자연재난 포함.....	17
04 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제도 변경.....	18
05 소방시설업 미등록영업 벌칙규정 강화.....	19
06 소방시설 위반행위 신고결과 통지.....	20
07 다중이용업소 허가관청의 확인사항 추가.....	21
08 다중이용업소 화재위험평가 대행자 등록기준 변경.....	22
09 긴급구조지원기관 능력평가 개선.....	23
10 영상통화기능을 활용한 119신고·접수처리.....	24
11 완주소방서 운영 개시.....	25

III. 농·축·수산·식품

01 PLS(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 전면 시행.....	29
02 농식품 창업 아카데미과정 교육 시행.....	30
03 전통식품 마케팅 활성화 지원사업 시행.....	31
04 종자생명산업 맞춤형 인력양성사업 시행.....	32
05 2019년도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개편.....	33
06 계란 산란일자 표시 의무화.....	34
07 닭, 오리 사육농장 및 부화장 방역 준수사항 강화.....	35
08 동물용 의약품 취급규칙 강화.....	36
09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금 인상.....	37
10 불법어업 신고포상금 지급액 상향.....	38
11 『전북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 확대.....	39
12 여성농업인 생생카드 확대 시행.....	40
13 농번기 공동급식 지원 확대.....	41
14 전라북도 귀농귀촌 상담 홍보전 개최.....	42

IV. 문화·예술·체육

01 문화누리카드 8만원으로 상향 지원.....	45
02 문화기반시설 내 문화예술교육사 배치.....	46
03 공·사립 작은도서관 운영 지원 확대	47
04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확대 운영.....	48

V. 복지·여성·보건

01 전북형 기초생활보장제 실시.....	51
02 자활장려금 지원	52
03 부모부담 차액보육료 지원액 인상.....	53
04 공공형 어린이집 교육환경개선비 지원.....	54
05 한부모가족 생활안정 지원.....	55
06 「아이돌봄지원사업」서비스 단가 인상 및 지원시간 확대.....	56
07 기초연금·장애인연금 저소득층 대상 조기 인상.....	57
08 장애등급제 폐지 및 맞춤형 지원체계 도입.....	58
09 다문화이주민플러스센터 운영.....	59
10 치매노인 공공후견 사업.....	60
11 정신건강복지센터 확대 운영 및 자살예방 심리지원.....	61
12 출산취약지역 임신부 이송 지원 확대.....	62
13 일반건강검진사업 대상 확대	63
14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사업 확대	64
15 식품미생물 시험·검사 수수료 인상	65
16 법정감염병 5종 추가 확인진단 시행	66

VI. 환경·녹지

01 어린이집에 대한 건축물 석면조사 면적기준 폐지.....	69
02 물놀이형 수경시설 신고대상 확대.....	70
03 가축분뇨 전자인계관리시스템 사용 의무대상 확대..	71
04 액비화 부숙도 기준 적용시설 확대	72
05 산지 내 태양광발전시설 억제를 위한 제도개선.....	73
06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대상 품목 확대.....	74
07 산림복지소외자에 대한 산림복지 체험기회 확대.....	75
08 해외산림인턴 참여자격 완화.....	76
09 특별관리임산물(산양삼) 포장규격 완화.....	77
10 자연휴양림 등급제도 실시.....	78

11 먹는물 수질감시항목 자연방사성물질 라돈 추가 검사.....	79
12 토양오염물질 신규 지정 등	80
13 수질오염물질 지정 등에 관한 지침 추가 시행.....	81
14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변경 등	82

VII. 건설·교통·통신

01 행복콜서비스(DRT) 확대 시행.....	85
02 도서관 여객선 차량운임 지원 확대.....	86
03 도시재생 뉴딜 소규모 재생사업 시행	87
04 특별교통수단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	88
05 희망하우스 빈집 재생사업.....	89
06 체설장비 현대화 사업 추진.....	90
07 시내버스 공공와이파이 구축	91
08 정보통신공사사업법 일부개정.....	9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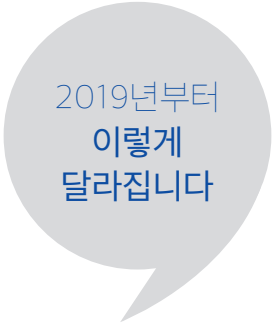
VIII. 경제·산업

01 전라북도 도약기업 육성 지원	95
02 국방산업 육성지원사업 지원대상 확대.....	96
03 수도권 전라북도 우수상품관 개설.....	97
04 전라북도 해외통상거점센터 구축.....	98
05 2019년 생활임금액 결정 시행.....	99
06 탄소복합재 공정장비 활용 중소기업 사업화 지원	100
07 새만금산업단지 임대용지 사용료 변경.....	101

IX. 일반행정·법무

01 도민평가단 확대 운영	105
02 도 산하 공공기관 직원채용 통합공고 및 정기채용 실시.....	106
03 찾아가는 주민참여 조례개폐청구 협력지원단 운영	107
04 전라북도행정심판위원회 심판청구 국선대리인 운영.....	108

* 2019년 달라지는 주요제도 요약	109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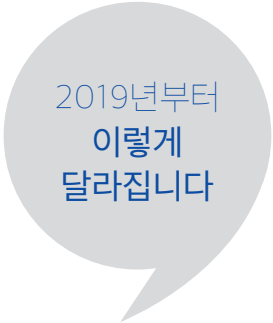
2019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이렇게
달라
집니다

I

세제 · 부동산

01 지방세 체납 가산금 인하	7
02 신혼부부 생애최초 구입 주택 감면	8
03 위기지역 내 중소기업 감면 신설	9
04 지방세 세무조사 제도 개선	10
05 종이 수입증지 민원서비스 개선	11



2019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01

지방세 체납 가산금 인하

전라북도 세정과(☎ 063-280-2311)

지방세 체납 가산금이 인하됩니다.

- 체납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았을 때 매월 체납세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증가산금이 인하됩니다.
 - 체납 증가산금률이 1.2%에서 0.75%로 인하됨



지방세 체납 가산금 인하

- 추진배경 시중 연체대출금리 인하 등을 고려하여 납세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국세와 동일하게 인하함
- 주요내용 체납 증가산금률을 당초 1.2%에서 0.45% 인하된 0.75%로 개정
 - ※ 지방세 체납시 3% 가산금이 부과되고 매 1개월 경과시마다 0.75%씩 증가산금이 부가됨
- 시행일 2019년 1월 1일

02

신혼부부 생애최초 구입 주택 감면

전라북도 세정과(☎ 063-280-2315)

신혼부부가 생애최초로 구입하는 주택에 대해서 취득세를 50% 경감합니다.

- 신혼부부의 주택마련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신혼부부가 생애최초로 구입하는 주택에 대해서 취득세를 경감합니다.
 - 부부합산소득이 7천만원(홀벌이의 경우 5천만원) 이하인 신혼부부*가 거주할 목적으로 3억원(수도권 4억원) 이하, 전용면적 60㎡ 이하인 주택을 생애최초로 취득한 경우 2019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의 50% 경감
 - * 신혼부부 : 혼인 3개월 전~혼인신고 후 5년 이내인 부부



신혼부부 생애최초 구입 주택 감면 주요내용

- 추진배경 신혼부부의 주택마련에 대한 경제적 부담 완화
- 주요내용 다음 각 요건을 갖춘 신혼부부가 거주목적으로 취득하는 주택에 대해 2019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 50% 경감
 - 주택 취득일 현재 신혼부부로서, 세대원 전체가 주택 취득일까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을 것
 - 주택 취득 직전연도의 신혼부부 합산소득이 7천만원(홀벌이 5천만원) 이하
 - 취득 당시 가액이 3억원 이하(수도권 4억원), 전용면적이 60㎡이하인 주택을 취득할 것
- 추진요건 주택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혼인하지 않거나, 1가구 1주택이 되지 않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없이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경감받은 주택을 매각·증여 또는 다른 용도(임대 포함)로 사용하는 경우 감면액 추징
- 시행일 2019년 1월 1일

03

위기지역 내 중소기업 감면 신설

전라북도 세정과 ☎ 063-280-2315

위기지역 내에서 사업전환계획 승인을 받은 중소기업에 대해 취득세와 재산세를 경감합니다.

- 위기지역(고용위기지역, 고용재난지역,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내 중소기업의 사업전환 촉진 및 고용안정화를 위해, 중소기업이 사업전환계획 승인을 받고 전환한 사업을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 및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 취득세 및 재산세를 경감합니다.

※ 감면대상 전환업종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 제4항에 따름

- 중소기업이 사업전환계획 승인일부터 3년 이내에 그 전환한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50% 경감
- 중소기업이 전환한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사업전환일 이후 최초로 재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 50% 경감



위기지역 내 중소기업 감면 주요내용

- 추진배경 위기지역 등에서의 사업전환 촉진 및 고용안정
- 대 상 2021년 12월 31일까지 사업전환계획 승인을 받은 위기지역 내 중소기업
- 주요내용
 - (취득세 50% 경감) 중소기업이 사업전환계획 승인일부터 3년 이내에 전환한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
 - (재산세 50% 경감) 중소기업이 전환한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 시 행 일 2019년 1월 1일

04

지방세 세무조사 제도 개선

전라북도 세정과(☎ 063-280-2749)

납세자의 권리보호 강화를 위해 지방세 세무조사 제도가 개선됩니다.

-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강화하고 투명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지방세 세무조사 제도를 개선합니다.
- 지방세 세무조사 중지기간 중에 자료제출 요구를 금지하는 규정 등을 신설하고, 납세자가 금품을 제공·알선하였을 경우 재조사할 수 있도록 현행 세무조사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



지방세 세무조사 제도 개선 주요내용

- 납세자 권리보호 제도 강화
 - 세무조사 착수 시 납세자권리헌장 낭독의무 등 신설
 - 사전통지를 생략한 경우, 세무조사 시 세무조사통지서 교부 신설
 - 세무조사 기간 연장사유 신설
 - ☞ 납세자보호관이 세금탈루혐의의 해명을 위하여 추가적인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기간연장 가능
 - 세무조사 중지기간 중 자료제출 요구 금지 신설
 - 세무조사 결과 통지내용 명확화 및 폐업 시에도 결과통지 의무화
 - ☞ 세무조사 내용, 과세표준, 세액 및 산출근거 등
- 납세자 금품 제공 사전 방지
 - 납세자가 금품을 제공하여 부실 세무조사를 했을 경우, 재조사 가능
- 시 행 일 2019년 1월 1일

05

종이 수입증지 민원서비스 개선

전라북도 세정과 ☎ 063-280-2320

전라북도 종이 수입증지 판매가 중단되고 앞으로는 증지 요금계기 또는 신용카드 단말기를 통해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기존에 판매된 종이 수입증지는 사용하실 수 있으며 환매도 가능합니다.

- 각종 민원 수수료 납부 시 증지 판매소에서 종이 수입증지를 구입하여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으나 앞으로는 증지 요금계기 또는 신용카드 단말기를 통해 현금,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
 - 도청, 직속기관, 사업소, 소방서 : 증지 요금계기 또는 신용카드 단말기 사용 납부
 - 경찰청 및 14개 시군 경찰서 : 신용카드 단말기 사용 납부
 - * 「총포화약법」 제67조 총포·화약소지허가 등 10종에 한함

〈전라북도 각종 민원처리 수수료 납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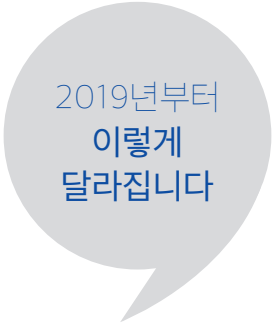
현행	개선
증지 요금계기 사용 또는 종이 수입증지 구입하여 납부	증지 요금계기 또는 신용카드 단말기 사용 납부 (단 경찰청 및 경찰서 총포·화약소지 허가 등 10종은 신용카드 납부만 가능)

- 기존에 판매 된 종이 수입증지는 사용 가능하며 환매도 가능
 - 종이 수입증지 환매 청구 시 판매가액의 95%로 환매 보상.
단 이미 사용하였거나 오손·훼손되어 환매가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제외



종이 수입증지 민원서비스 개선

- 추진배경 민원인이 종이 수입증지 구입을 위해 증지 판매소를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 해소 및 민원처리의 효율성 증대
- 주요내용
 - 종이 수입증지 판매 중단, 경찰청 및 경찰서 총포·화약소지 허가 등 수수료 납부를 위한 전용 신용카드 단말기 보급
 - 기 판매된 종이 수입증지 환매처리
- 시 행 일 2019년 3월 이후(예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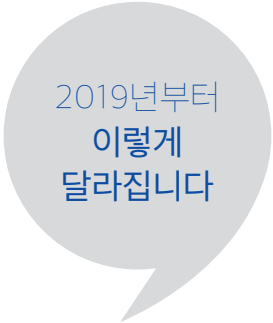
2019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이렇게
달라
집니다

II

재난안전 · 소방

01 승강기 업종 세분화 및 안전관리 책임 강화.....	15
02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제 시행	16
03 폭염 · 한파로 인한 피해 자연재난 포함.....	17
04 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제도 변경	18
05 소방시설업 미등록영업 벌칙규정 강화.....	19
06 소방시설 위반행위 신고결과 통지	20
07 다중이용업소 허가관청의 확인사항 추가.....	21
08 다중이용업소 화재위험평가 대행자 등록기준 변경	22
09 긴급구조지원기관 능력평가 개선.....	23
10 영상통화기능을 활용한 119신고 · 접수처리	24
11 완주소방서 운영 개시	25



2019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01

승강기 업종 세분화 및 안전관리 책임 강화

전라북도 안전정책관실(☎ 063-280-2782)

● 승강기 관련 업종 세분화 및 승강기(부품) 안전인증제도 도입

- 승강기 관련 등록업종이 제조·수입업과 유지관리업 등 2종류에서 승강기 부품(31종) 제조·수입업이 신설되어 3종류로 세분화되었습니다.
- 승강기 제조업체는 승강기 모델별로, 승강기 부품 제조업체는 부품(20종)별로 지정인증센터에서 3년마다 안전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 제조업체는 승강기 판매 후에도 유지관리업체에게 기술지원과 교육을 제공해야하고, 부품의 권장 교체주기와 가격정보를 공개해야 합니다.

● 승강기 관리주체의 안전관리 책임 강화

- 관리주체는 승강기 사고배상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 중대한 사고나 고장이 발생했을 때 한국승강기안전공단에 신고하지 않으면 유지관리업체와 관리주체, 모두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 노후 승강기에 대한 관리주체의 부담 경감

- 노후 승강기를 교체할 때 건축물 구조변경 없이는 교체가 곤란한 부품들을 재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관리주체의 부담을 경감시켰습니다.

● 정부(지방자치단체)의 안전관리 책임 강화

- 불법운행 승강기 및 승강기 업종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 승강기 관련 사업자 〉

승강기 업종	(현행) 승강기 제조·수입업, 승강기 유지관리업 (추가) 승강기 부품(31종) 제조·수입업
안전인증제	(신설) 승강기 및 승강기 부품(20종)에 대한 안전인증제도 도입
제조업체 책임	(현행) 유지관리용 부품 및 안전점검용 장비 등 유·무상 제공 (추가) 기술지원 및 교육 제공, 부품 교체주기 및 가격정보 공개

〈 관리주체(소유자 또는 관리책임자) 〉

보험 가입	(신설) 승강기 사고배상책임보험 의무 가입
사고(고장) 신고	(현행) 유지관리업체 책임 → (변경) 유지관리업체 + 관리주체
신규 설치 인정	(현행) 완전 철거 후 전면 재설치 시에만 인정 (변경) 법에서 정한 핵심부품들을 리모델링한 경우도 인정

〈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

실태조사	(강화) 불법운행 승강기 실태조사 주기 (2년 → 1년) (신설) 승강기 제조·수입업 및 유지관리업 실태조사 (매년)
------	--

● 시행일 : 2019년 4월 17일

02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제 시행

전라북도 자연재난과 ☎ 063-280-4381)

“지진 안전성 표시제”가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제”로 변경 시행되어 민간시설물 까지 대상을 확대하고 민간의 자발적 내진보강을 유도합니다.

- 기존에는 지진으로부터 안전한 건축물 제공을 위해 “지진 안전성 표시제”를 도입하여 공공건축물을 대상으로 지진 안전성 표시를 시행하였으나,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제”로 변경운영하여 민간 시설까지 대상을 확대
 - 내진이 확보된 시설에 대해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기관(행안부 지정)”의 심사를 통한 시설물 지진 안전 인증

현행	개정
【지진 안전성 표시제】 내진이 확보된 공공 건축물을 확인기관 (도, 행안부)이 안전성 확인 후 안전성 표시(인증마크 부착)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제】 내진이 확보된 공공 및 민간건축물을 인증기관(행안부 지정)이 확인하여 안전성 인증(인증마크 부착) ※ 대상 : 민간 건축물까지 확대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제 시행

- 추진배경 민간의 자발적 내진보강 유도를 위해 당초 공공건축물에서 민간시설물까지 대상 범위를 확대 하여 지진 안전성에 대한 정보공개와 건물주 간 선의의 경쟁 유도 ⇒ 내진을 제고
- 주요내용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제를 도입 내진확보완료 건축물*에 인증마크 부착
 * 행정안전부에서 지정한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기관의 확인을 완료한 시설
- 시 행 일 2019년 1월 중

03

폭염·한파로 인한 피해 자연재난 포함

전라북도 자연재난과 ☎ 063-280-2743

자연재난에 폭염·한파가 추가되어 2018년 7월 1일 이후 발생한 폭염 등 자연재난에 의한 피해자에 대해서도 보상이 소급 적용됩니다.

- 폭염에 의한 인명피해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항 가목에 따른 자연현상(폭염)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 또는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어린이 차안방치, 정신질환자 등 환자보호시설 관리자 또는 보호자의 과실, 과도한 음주 등으로 인한 사망, 다른 법률 등에 의한 산재보험 대상 등은 제외
- 재난지원금 지급
 - 자연재난 피해시 피해신고서 접수(시·군·구)
 - 사망 1,000만원, 부상자는 등급(1~14등급)에 따라 250~500만원



폭염·한파 자연재난 포함

- 추진배경 2018년 기록적인 폭염의 발생으로 많은 피해자가 발생하였으나, 폭염이 자연재난에 포함되지 않아 폭염 및 한파를 자연재난에 포함하고 피해자에 대해서도 보상할 수 있도록 법 개정
- 주요내용 2018년 7월 1일 이후 폭염특보기간 사망의 경우 재난지원금 소급대상이 되므로 의사의 진단서를 포함하여 해당 시·군·구에 자연재난 피해신고서 접수
- 시행일 2018년 9월 18일

04

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제도 변경

전라북도 자연재난과 ☎ 063-280-2743

사업의 단계 및 규모에 따라 협의 기준을 달리할 수 있도록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 제도가 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제도로 변경 됩니다.

● 재해영향평가 등의 제도

- 개발계획 등이 수립·허가되는 과정에서 해당 개발행위로 인해 유역에 미치는 재해영향을 사전에 평가하고
 - 홍수, 내수, 사면, 지반, 지진, 해안, 바람 등 재해유형별 피해와 피해를 유발하는 증가요인을 분석하여 그 요인들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추진하도록 하는 제도

● 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 종류 및 범위

-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 및 제6조제1항 별표1에서 규정한 사업



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제도 변경

- 추진배경 사업의 단계 및 규모 등에 관계없이 동일한 협의 기준을 적용하고 있어 제도운영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행정계획은 재해영향성검토, 개발 사업은 재해영향평가의 협의를 하도록 함

• 주요내용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대상사업		사업의 종류	규 모
행정계획	재해영향성검토	45개 종류 (36개 법령)	규모에 관계없음
개발사업	재해영향평가	56개 종류 (47개 법령)	(면적) 5만㎡ 이상 (길이) 10km 이상
	소규모재해영향평가		(면적) 5천㎡ 이상 5만㎡ 미만 (길이) 2km 이상 10km 미만

- 시 행 일 2018년 10월 25일

05

소방시설업 미등록영업 벌칙규정 강화

전라북도 방호예방과 ☎ 063-280-3807

소방시설업 등록을 하지 않고 영업할 경우의 처벌규정이 강화 됩니다.

- 소방시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营业을 한 자에 대한 벌칙을 현행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 조정
- 유사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각 법률이 규정하는 법정형과 형평성을 맞추기 위함

현행	→	개정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무허가 소방시설업 벌칙규정 강화

- 추진배경 타 법률과 비교하여 낮은 벌칙규정 조정
- 주요내용 소방시설업 미등록자의 영업시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개정법령 소방시설공사업법 제35조
- 시행일 2018년 12월 19일

06

소방시설 위반행위 신고결과 통지

전라북도 방호예방과 ☎ 063-280-3807

소방시설 위반행위 신고시 처리결과를 신고인에게 통지해 드립니다.

-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소방시설을 설치 또는 유지·관리하지 아니하는 경우 누구든지 소방본부장 등에게 신고할 수 있고, 이에 따른 신고포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처리 결과 통지 규정은 없었음.
- 위반행위 신고시 소방관서에서 이를 즉시 처리하고, 신고자에게 위반행위가 시정되었는지 결과를 통지하도록 규정함.

현행

소방시설 위반행위 신고시
포상금은 지급하나 **처리결과는 미통보**



확대

신고인이 소방시설의 위법사항이 개선되었는지
인지할 수 있도록 소방관서에서 통지 의무화



소방시설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처리결과 통보

- 추진배경 소방시설 위반행위에 대해 신고인이 처리결과를 알 수 없어 소방관서에 문의하는 번거로움 발생
- 주요내용 소방시설 위반행위 신고를 받은 경우 신고 내용을 확인하여 이를 신속하게 처리하고, 그 처리 결과를 절차에 따라 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함.
- 개정법령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의3 (위반행위의 신고 및 신고 포상금의 지급)
- 시행일 2019년 4월 17일

07

다중이용업소 허가관청의 확인사항 추가

전라북도 방호예방과 ☎ 063-280-3836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주 변경 또는 지위승계 신고시 새로운 업주는 허가관청에 소방안전교육 이수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기존에는 다중이용업소 허가관청에서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여부만을 지위승계 신고수리 전에 확인했으나, 이제는 새로 다중이용업주가 되려는 사람은 추가로 소방안전 교육 이수 여부를 확인받아야 함
- 영업주 변경 또는 지위승계 신고시 허가관청에 소방안전교육 이수증명서 및 화재배상책임 보험 증권 사본을 제출하여야 신고수리가 가능

현행	개정
영업주변경 또는 지위승계 신고시 화재배상책임보험 증권사본 제출	① 소방안전교육 이수증명서 제출 ② 화재배상책임보험 증권사본 제출

* 소방안전교육이수증명서 ☞ 전국 각 소방서 또는 인터넷사이버 교육 수료후 증명서 수령가능



다중이용업소 허가관청의 확인사항 추가

- 추진배경 다중이용업주 변경 또는 지위승계 신고 수리 후 업주가 소방안전교육을 받지 않고 다중이용업을 운영하는 문제가 있어 현행 제도의 미비점 개선 · 보완 필요
- 주요내용 허가관청은 다중이용업주 변경 또는 지위승계 신고 수리전에 다중이용업을 하려는 자의 다음의 사항의 이행여부를 확인해야 함
 - ①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 이수
 - ②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 개정법령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의2(허가관청의 확인사항)
- 시행일 2019년 4월 17일

08

다중이용업소 화재위험평가 대행자 등록기준 변경

전라북도 방호예방과 ☎ 063-280-3836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이 화재위험평가 대행자의 등록이 취소된 경우 해당결격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바로 대행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 기존에는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을 이유로 화재위험평가 대행자의 등록이 취소된 경우 취소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대행자로 등록할 수 없었으나, 앞으로는 해당 결격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즉시 화재위험평가 대행자로 등록 가능함

현행	개정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대행자의 등록이 취소된 경우 취소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하면 대행자 등록을 할 수 없음	해당 결격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바로 화재위험평가 대행자 등록 가능



다중이용업소 화재위험평가 대행자 등록기준 변경

- 추진배경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을 이유로 대행자의 등록이 취소된 경우 취소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등록을 할 수 없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결격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바로 대행자의 등록을 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 주요내용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의 해당 결격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경과기간 없이 바로 화재 위험평가 대행자의 등록이 가능
- 개정법령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6조(화재위험평가 대행자의 등록 등)
- 시행일 2019년 4월 17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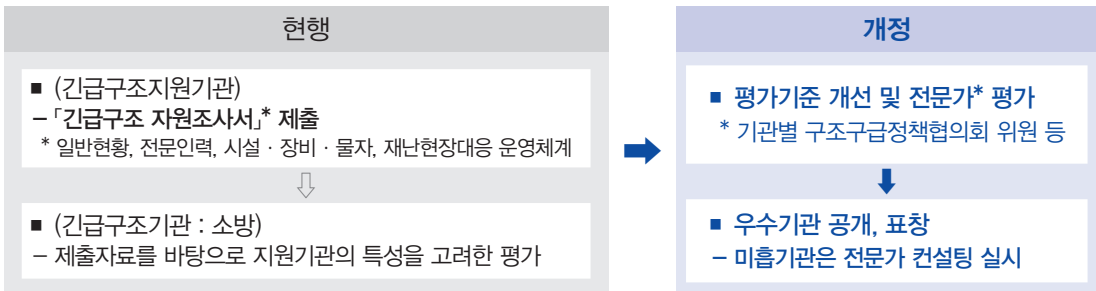
09

긴급구조지원기관 능력평가 개선

전라북도 구조구급과(☎ 063-280-3851)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재난현장 긴급구조에 필요한 능력유지 확인 평가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전문가 평가를 도입하고 결과를 대국민 공개합니다.

- 기존에는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일반현황이나 전문인력 등 자원조사서를 제출하는 수준 이었고, 평가 결과에 따라 지원기관의 개선 의무규정*이 있음에도 개선하지 않는 사례가 다수 발생
* 재난안전법 시행령 제66조의3 제4항
- 평가기준을 평가 중심으로 개선하고,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이 평가하여 평가결과를 대국민 공개하고, 우수기관에 표창 등 인센티브를 제공함
* 외부위원 3명(위원장 포함)과 내부위원 2명으로 구성
- 미흡기관은 전문가 역량강화 컨설팅 실시(우수 30%, 보통 60%, 미흡 10%)



긴급구조지원기관 능력평가 개선

- 추진배경 긴급구조기관과 지원기관과의 유기적·협업적 현장대응을 위해 실시하는 지원기관 능력평가 실효성 확보
- 주요내용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재난대응역량을 전문가 평가 실시하고, 우수기관은 표창 등 인센티브 제공, 미흡기관은 전문가 컨설팅 실시
- 시행근거 재난안전법 제55조의 2
- 시행일 2019년 1월 1일

10

영상통화기능을 활용한 119신고·접수처리

전라북도 119종합상황실(☎ 063-280-3896)

스마트폰 영상통화기능을 활용한 119신고 접수·처리로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합니다.

- 기존에는 119상황실과 신고자가 일반전화·휴대폰의 음성통화로 긴급상황을 신고·접수 처리하였으나, 이제부터는 영상통화로 신고하면 즉시 현장상황을 파악하여 적절한 응급처치 지도와 신속한 소방력 투입이 가능
 - 심정지환자 등 응급환자에 대해 영상으로 정확한 상태확인 및 응급처치 안내가 가능해져 골든타임 확보 및 소생을 향상에 기여

현행	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음성통화로 현장상황 판단- 음성대화 중심의 응급처치 안내- 정확한 응급처치 시행여부 확인 불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장영상으로 신속한 상황 판단- 영상통화로 효율적이고 정확한 응급처치 안내



영상통화기능을 활용한 119신고·접수처리

- 추진배경 음성통화만으로 상황 판단 및 정확한 의사전달 등 한계
 - ※ 스마트폰 보급률 세계 4위('17년 기준 71.5%) 및 영상 전송기술의 발달로 기존 음성통화 중심에서 영상통화로 전환되는 시대적 흐름
- 주요내용
 - 스마트폰 영상통화기능으로 119신고·접수 처리
 - 심정지환자 등 즉각적인 응급처치가 필요한 응급환자에 대하여 영상을 통한 정확한 응급처치 안내시행(심정지, 기도폐쇄, 절단 등)
 - 중증환자 신고자(목격자)에 의한 신속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시행을 통한 골든타임 확보
- 시 행 일 2019년 3월 1일

11

완주소방서 운영 개시

전라북도 소방행정과(☎ 063-280-358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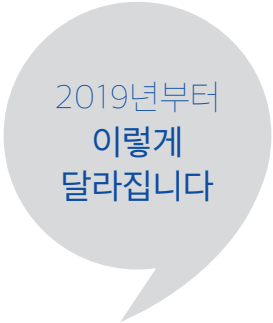
완주군 삼봉지구에 완주소방서가 문을 엽니다.

- 기존에는 전주덕진소방서와 전주완산소방서가 나눠 관할하던 완주군 지역의 육상재난을 전담할 완주소방서가 2018년 1월 운영을 시작합니다.
- 2017년 부지매입 및 설계, 2017년 11월 착공 후 2018년 12월 완공



완주소방서 운영 개시

- 위 치 • 완주군 삼례읍 삼봉도시개발구역 내 (수계리 325-1번지)
- 주요내용 • 기본계획 수립 : '16.6월 • 부지매입 : '17.2월
• 설계완료 : '17.9월 • 건축준공 : '18.12월
- 시 행 일 2019년 1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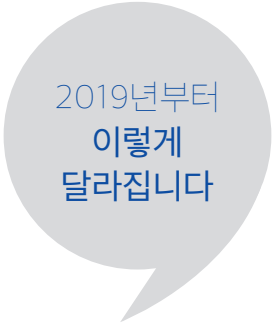
2019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이렇게 달라 집니다

III

농·축·수산·식품

01 PLS(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 전면 시행	29
02 농식품 창업 아카데미과정 교육 시행	30
03 전통식품 마케팅 활성화 지원사업 시행.....	31
04 종자생명산업 맞춤형 인력양성사업 시행	32
05 2019년도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개편.....	33
06 계란 산란일자 표시 의무화	34
07 닭, 오리 사육농장 및 부화장 방역 준수사항 강화.....	35
08 동물용 의약품 취급규칙 강화	36
09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금 인상	37
10 불법어업 신고포상금 지급액 상향.....	38
11 『전북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 확대	39
12 여성농업인 생생카드 확대 시행.....	40
13 농번기 공동급식 지원 확대.....	41
14 전라북도 귀농귀촌 상담 홍보전 개최.....	42



2019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01

PLS(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 전면 시행

전라북도 친환경유통과 ☎ 063-280-2691

2019년부터 농약은 해당 농작물에 등록된 농약만 사용하여야 하며, 등록되지 않은 농약은 사용이 금지됩니다.

- PLS(Positive List System)란 ?
 - 작물별로 등록된 농약에 한해 일정기준 내에서 사용하도록 하고, 잔류허용기준*이 없는 농약의 경우 일률적으로 0.01ppm을 적용하는 제도
 - * 잔류허용기준 : 사람이 일생동안 섭취해도 건강에 이상이 없는 수준의 과학적으로 입증된 허용량
- 2019년부터 해당 농작물별 등록되지 않은 농약을 사용하면, 농약잔류허용기준 초과로 수확한 농산물을 판매할 수가 없습니다.

현행	개정
잔류허용기준 미설정 농약은 잠정기준* 적용	잠정기준 적용 중단 일률기준(0.01mg/kg, ppm) 적용

* 잠정기준 : ① CODEX 기준 ② 유사 농산물의 최저 기준 ③ 해당 농약의 최저 기준



2019년 PLS 전면시행

- 추진배경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수입 식품의 미등록 농약에 대한 관리 강화 및 국내식품 잔류농약 안전관리
- 주요내용 작물별 등록된 농약 이외에는 사용을 금지하는 제도(PLS)
 - * (PLS 적용 예시) 취나물에 배추 농약 성분으로 등록된 'Buprofezin' 성분의 농약 사용 '잔류 농약 조사' 결과 0.03ppm 검출
 - (시행 전) '해당 농약의 최저 기준'인 0.05ppm 이내로 검출되어 '적합'
 - (시행 후) 잔류허용기준인 0.01ppm이 일률 적용되어 '부적합'
- 시 행 일 2019년 1월 1일

02

농식품 창업 아카데미과정 교육 시행

전라북도 농식품산업과 ☎ 063-280-3262

도내 농식품 예비창업자들의 초기진입 단계부터 성장 보육단계까지 전 주기적 교육을 통해 창업 초기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농식품 창업 아카데미 과정’ 교육을 시행합니다.

- 전북 농식품산업과 관련된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실전 창업교육, 네트워킹을 통한 경쟁력 있는 농식품산업 창업자 발굴 및 육성
 - 도내 농식품 관련 예비창업자 및 3년미만 창업자를 대상으로 창업초기단계, 성장단계별 교육을 통해 창업 초기 리스크를 최소화하여 창업성공률 제고
 - 식품산업 전문인력 양성과정(전라북도 생물산업진흥원)

현행	확대
① 석사특성화 과정 ② 식품산업 현장실무인력 양성과정	① 석사특성화 과정 ② 식품산업 현장실무인력 양성과정 ③ 농식품 창업 아카데미 과정(신설)

* 2019년부터 석사특성화 과정 신규모집 및 교육은 전북테크노파크에서 시행

농식품 창업 아카데미 과정

- 교육대상 도내 농식품기업 예비창업자 및 3년 미만 창업자
- 교육과정 2개 과정, 20명(과정별 10명)
 - (창업초기) 농식품 관련 예비창업자 및 초기창업자의 창업사업화를 위한 아이디어 사업화 전략, 시장진출전략, 사업계획 수립 등 교육프로그램 운영
 - (창업성장) 농식품 창업기업의 해외 판로개척을 위한 무역·수출기초, 수출 사례 시장 반응 테스트 등 실무형 교육프로그램 운영
- 교육주관 (재)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
- 시행일 2019년 1월 1일

03

전통식품 마케팅 활성화 지원사업 시행

전라북도 농식품산업과 ☎ 063-280-3676

전통식품(전통주 포함) 등을 직접 제조 · 판매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패키지식 맞춤형 마케팅 활성화 지원사업을 신규로 시행합니다.

- 전통식품(전통주 포함) 등을 직접 제조 · 판매하는 업체(운영실적 1년 이상)를 대상으로 제품 개발, 포장 용기개선 중 필요한 분야(자율선택) 및 마케팅 활성화 분야(필수선택)를 지원

• 사업량 : 10개소 이상(개소당 최대 50백만원)

지 원 분 야 (지원사항)		세 부 내 용
① 제품개발 (R&D포함)	신제품 개발	신제품 개발 및 제품 리뉴얼 등 * 제품 개선 · 개발을 위한 컨설팅 비용 등 포함 * 전문가 위탁 개발 포함
	기존제품 품질개선	
② 포장 및 용기개선	포장 개선	포장디자인 및 용기 개발 · 개선 등 * 시제품 제작 포함
③ 마케팅 활성화	매체광고	각종 매체광고 및 온라인 홍보 등
	홍보물 제작	리플렛, 카탈로그, 홍보동영상 등 제작
	온 · 오프라인 마케팅	홈페이지 제작 및 기존 홈페이지 리뉴얼, 모바일 쇼핑물 제작, 온 · 오프라인쇼핑몰 입점비용, 국내 · 외 박람회 및 전시회 참가 부스비 지원, 소비자 체험 · 교육행사 등에 소요되는 비용 등 * 개인경비 제외(교통, 숙박, 식사 등)
	브랜드 개발	브랜드 네이밍, CI, BI, 캐릭터 개발, 등록비 등 * 시제품 제작 포함



전통식품 마케팅 활성화 지원사업

- 추진배경 도내 전통식품 업체의 자체 상품개발 및 마케팅 능력 배양으로 국내·외 경쟁력을 강화하여 전통식품 업체의 매출 신장 제고
- 주요내용 전통식품 및 전통주를 직접 제조 · 판매하는 업체 대상 자율선택(제품개발, 포장 용기개선 분야) 지원 및 필수선택(마케팅 활성화 분야) 지원
- 추진기관 (재)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
- 시행일 2019년 1월 1일

04

종자생명산업 맞춤형 인력양성사업 시행

전라북도 농식품산업과 ☎ 063-280-4632

전북 농생명산업 육성을 위한 ‘종자기업 맞춤형 현장 실무인력 교육’과 종자기업 구인·구직 중개 지원을 위한 ‘인력뱅크’를 운영합니다.

- 전북 종자기업 맞춤형 인력 양성을 위해 종자산업 인력양성 교육과정 및 구인·구직 중개 지원을 위한 인력뱅크 운영
 - 우수 교육 수료생 종자기업 인턴십 기회 제공 및 종자산업 분야 현장 실무인력 양성을 통한 취업지원
 - 종자기업 맞춤형 인력양성 양성과정(농업실용화재단 종자산업진흥센터)
 - 구인·구직 중개지원을 위한 취업캠프, 멘토링 등 인력뱅크 운영



종자생명 맞춤형 인력양성 교육과정

- 교육대상 농학, 원예, 농식품 등 농업계열 고교 및 대학교 졸업(예정)자, 미취업자, 종자기업 재직자 등
- 교육과정 2개 과정, 35명[육종보조원 양성(20명), 미래육종가양성(15명)]
 - (육종보조원양성)
 - 자격증(종자기사/산업기사) 취득을 위한 필기 및 실기시험 대비
 - 재배학, 육종학, 종자학 등 이론과 실습 위주의 수업
 - (미래육종가양성)
 - 종자기업 취업을 위한 실무능력 배양
 - 조직배양, 병해충 진단, 인공수분 등 육종 심화 수업
- 교육주관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종자산업진흥센터
- 시 행 일 2019년 1월 1일

05

2019년도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개편

전라북도 농촌활력과 ☎ 063-280-4194

2019년도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사업이 개편 되었습니다

●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중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마을단위 개발사업 개편

• 농촌중심지 **현행 3체계(통합, 선도, 일반지구)**를 **2원화(농촌중심지활성화, 기초생활거점)**

현행	→	개편
농촌중심지활성화(통합) (120억) 농촌중심지활성화(선도) (80억), 농촌중심지활성화(일반) (60억)		농촌중심지활성화 (150억) 기초생활거점사업 (40억)
※ 시도별 농촌중심지 신청 가능 개소 : 현행) 3개소 → 개편) 2개소		

• 마을단위 개발사업 **현행 3체계(공동문화복지, 체험소득, 경관생태)**를 **일원화(자율개발)**

현행	→	개편
마을단위 공동복지문화 (5억) 마을단위 체험소득 (5억), 마을단위 경관생태 (5억)		마을단위 자율개발 (5억)
※ 시도별 농촌중심지 신청 가능 개소 : 현행) 3개소 → 개편) 2개소		

● 권역단위 종합개발사업, 시 · 군창의사업은 폐지

현행	→	개편
권역단위 종합개발사업 (40억), 시 · 군창의사업 (10억)		폐지

● 농촌다움복원, 신활력플러스, 농촌형 공공임대주택사업은 2019년 신규 추진

2019년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개편

- 추진배경 효율적인 일반농산어촌개발 사업추진을 위해 개편
- 주요내용 신설, 폐지 및 사업 통합
 - ① 신 설 : 농촌다움복원, 신활력플러스, 농촌형 공공임대주택사업
 - ② 개 편 : 농촌중심지활성화, 마을단위 자율개발
 - ③ 폐 지 : 권역단위 종합개발, 시 · 군창의
- 시 행 일 2019년 1월 1일

06

계란 산란일자 표시 의무화

전라북도 동물방역과 ☎ 063-280-2655

계란 산란일자 표시가 의무화됩니다.

- 축산물의 세부표시기준에 따라 식용란은 산란일자를 2019년 2월 23일부터 ○○△△(월일)로 표시하여야 합니다.

※ 근거 :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6조 1항,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8-9호(2018.2.23.)의 축산물의 세부표시기준의 부칙1 및 별표1

현행

축산업등록 고유번호 : 5자리
사육환경표시 : 1자리
산란일자 표시기준 없음



신설



계란산란일자 표시 의무화

- 추진배경 소비자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식용란의 산란일자 표시 의무화
- 주요내용 난각에 4자리의 산란일자 표기
- 시행일 2019년 2월 23일

07

닭, 오리 사육농장 및 부화장 방역 준수사항 강화

전라북도 동물방역과 ☎ 063-280-4641

닭, 오리 사육농장 및 부화장의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설치가 의무화됩니다.

-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7조의6(방역기준의 준수) 제1항에 따른 가축소유자 등의 방역기준에 가축의 입식, 거래 및 관리 시 준수사항이 강화됩니다.
- 닭, 오리 사육농장 및 부화장의 출입구 및 농장 내 각 동별 출입구에 내부촬영이 가능하도록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설치와 정상작동을 관리하고 영상기록은 촬영일 부터 1개월 이상 보관



• 시 행 일 시 행 일 : 2019년 7월 1일

08

동물용 의약품 취급규칙 강화

전라북도 동물방역과 ☎ 063-280-4642

- ① 동물용의약품 제조관리자, 안전관리책임자, 동물용의약품 도매상 업무관리자는 1년에 8시간이상 안전교육을 이수받도록 의무화합니다.
- ② 동물용의약품 도매상의 공급과 품질관리를 위한 관리책임자의 지정, 품질관리 기준서 작성 운용을 의무화합니다.

- 동물용의약품은 동물용으로만 사용되는 의약품을 말하며 양봉용 · 양잠용 · 수산용 및 애완용(관상어 포함) 의약품을 포함하며 관련규정이 강화 · 개선됩니다.
 - 동물용의약품 제조관리자 등의 교육(제13조의4) 의무화
 - 제조관리자, 안전관리책임자 및 동물용의약품 도매상의 업무를 관리하는 자는 1년에 8시간 이상 동물용의약품 안전성 및 유효성, 제조 및 품질관리, 시판 후 안전관리에 대한 교육을 받도록 의무화합니다.
 - 동물용의약품 도매상의 유통품질 관리 기준 강화
 - 동물용의약품의 공급과 품질관리를 위한 관리책임자(약사)의 지정과
 - 동물용의약품의 공급과 품질관리 기준서(시설 및 설비관리 기준서, 공급관리 기준서, 품질 및 환경위생관리 기준서)의 작성 · 운용을 의무화합니다.



• 시 행 일 2019년 9월 15일

09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금 인상

전라북도 해양수산과 ☎ 063-280-4646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사업의 수산직불금이 1어가당 연 60만원에서 65만원으로 인상됩니다.

- 어업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불리한 어촌지역에 대한 지원을 통해 어업인의 소득보전과 지역활성화 도모를 위하여 지급하는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금액이 어가 당 60만원에서 65만원으로 인상됩니다.

현행	인상
1어가당 연 60만원 지급	1어가당 연 65만원 지급



수산직불금 신청자격 및 지급 요건

- 추진배경 한중 FTA 여·야·정 합의('15년 11월)
 - 단계적 인상('16~'20년까지 어가당 연 50만원에서 70만원 으로 인상)
 - ※ '16년(50만원), '17년(55만원), '18년(60만원), '19년(65만원)
- 신청자격 사업대상(조건불리) 지역에 거주하면서 「수산업 · 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 제1호 가목의 어업 (수산동식물을 포획 · 채취하거나 양식하는 산업에 한함)을 경영하는 어업인
 - ① 어업경영을 통한 수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자
 - ② 1년 중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하는 자
- 지급요건 시장 · 군수가 수산직불금 지급대상 어촌마을을 선정하여 통보한 날부터 수산 직불금 지급일 까지 주민등록지 기준으로 조건불리지역에 계속 거주하고 있는 어업인
- 시 행 일 2019년 1월 1일

10

불법어업 신고포상금 지급액 상향

전라북도 해양수산과 ☎ 063-280-4655

불법어업 신고포상금액을 상향하고 수산자원 남획예방 및 어업질서 확립에 크게 기여한 신고사항에 대한 신고포상금액 신설

- 불법어업(포획, 채취, 소지, 유통, 가공, 보관, 판매) 신고자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함.[신고포상금액 상향]
 - (사법처분) 징역형 1년 이상 300만원, 징역형 1년 미만 200만원, 벌금액의 100분의 50, 하한액 100만원
 - (행정처분) 어업 등 행정처분 취소 50만원, 정지 30만원, 경고 10만원
- 수산자원 남획예방 및 어업질서 확립에 크게 기여한 신고사항에 대하여 신고포상금액을 새로이 정함.
 - 무면허·무허가어업, 면허·허가어업 외의 어업, 대게·꽃게 포획·소지·유통·가공·보관 또는 판매, 어선의 사용제한, 폭발물·유독물·전류사용 포획·채취, 조업금지구역 위반

현행	개정
[별표] 1. 불법어업 신고포상금 지급기준 - 징역 1년 이상 200만원, 1년 미만 100만원 - 벌금액 100분의 10, 하한액 20만원 - 어업 등 행정처분 10만원	[별표] 1. 불법어업(포획, 채취, 소지, 유통, 가공, 보관, 판매) 신고포상금 지급기준 - 징역 1년 이상 300만원, 1년 미만 200만원 - 벌금액 100분의 50, 하한액 100만원 - 어업 등 행정처분 취소 50만원, 정지 30만원, 경고 10만원



불법어업 신고포상금 지급액 상향

- 추진배경 불법어업 신고기능 활성화 및 현행 고시의 일부 미비점 개선·보완
- 주요내용 불법어업, 불법무기산, 수산자원 남획예방 및 어업질서 확립에 크게 기여한 자에 대한 신고포상금 상향 지급
- 시행일 2019년 1월 1일

11

『전북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 확대

전라북도 친환경유통과 ☎ 063-280-4633

농산물 최저가격을 보장받을 수 있는 대상품목을 시·군별로 최대 8개 품목으로 확대하고 기준가격도 상향조정합니다.

- 2016~2018년 시범사업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현장농업인의 의견을 반영해 농산물 가격이 하락해도 도내 농업인의 경영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대폭 개선하였음
 - (대상품목 확대) 당초) 시군별 2품목 → 변경) 시군별 최고 8품목
 - (기준가격 조정) 기준가격 중 유통비의 산정방식 변경으로 가격 상향조정
- 시군별 대상품목

시군명	품목수	대 상 품 목
전주시	4	양파, 마늘, 건고추, 가을배추
군산시	8	양파, 마늘, 생강, 건고추, 가을무, 가을배추, 노지감자, 대파
익산시	5	생강, 건고추, 가을배추, 대파, 노지감자
정읍시	4	양파, 생강, 건고추, 노지감자
남원시	5	양파, 생강, 건고추, 노지감자, 대파
김제시	8	양파, 마늘, 생강, 건고추, 가을무, 가을배추, 노지감자, 대파
완주군	4	마늘, 건고추, 가을배추, 대파
진안군	4	양파, 가을무, 가을배추, 노지감자
무주군	4	양파, 건고추, 가을배추, 노지감자
장수군	8	양파, 마늘, 생강, 건고추, 가을무, 가을배추, 노지감자, 대파
임실군	3	생강, 가을무, 노지감자
순창군	3	양파, 건고추, 가을무
고창군	3	생강, 대파, 노지감자
부안군	5	마늘, 생강, 건고추, 노지감자, 대파



전북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

- 추진배경 농산물의 가격 불안정성에 대응하고, 효율적 농가경영 안정시스템 구축으로 궁극적인 농가소득 증대
- 주요내용 대상농산물의 시장가격이 기준가격 이하로 하락했을 경우 차액의 일부(90% 이내) 지원
* 지원대상 : 대상품목을 시·군 통합 마케팅 전문조직 및 지역농협에 계통출하하는 농가
- 시행일 2019년 1월 1일

12

여성농업인 생생카드 확대 시행

전라북도 농업정책과 ☎ 063-280-4154

여성농업인에게 문화활동 등의 기회를 제공하는 여성농업인 생생카드에 1인당 연간 15만원을 지원합니다.

- 여성농업인 생생카드 지원사업은 농작업과 가사를 병행하는 여성농업인을 대상으로 각종 여가 및 레저활동의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임
 - 지원대상은 실제 영농에 종사하고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20세~70세 미만 여성농업인으로 2018년도에는 여성농업인 1인당 연간 12만원을 지원하였음
- 2019년 2월부터 20세~ 75세 이하 여성농업인으로 확대하여 1인당 15만원을 상향 지원함

현행	→	확대
20세~70세 미만 12만원(자부담 2만원 포함)		20세~75세 이하 15만원(자부담 2만원 포함)



여성농업인 생생카드 지원 확대

- 추진배경 문화적 여건이 열악한 여성농업인에게 문화활동 기회 제공
- 주요내용 건강관리, 문화활동 시 사용할 수 있는 여성농업인 생생카드 발급(1인당 연간 15만원)
 - 지원대상 : 실제 영농에 종사하고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20세 이상 ~ 75세 이하 여성농업인
 - * 제외대상 : '18.1.10 이후 농업경영체등록 농어가, 타 유사 복지서비스 수혜자, 타 산업분야 사업자등록 및 전업적 직업을 가진 여성농업인
 - 사용기간 : 카드발급일 ~ 2019년 12월 31일까지
 - 지원신청 :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 카드발급은 농협 시군지부
 - 사 용 처 : 37개 업종(레포츠클럽, 영화관, 미용실, 안경점, 음식점 등)
- 시 행 일 2019년 2월 1일

13

농번기 공동급식 지원 확대

전라북도 농업정책과 ☎ 063-280-4154

공동급식 기반시설을 갖춘 마을에 농번기 공동급식을 지원합니다.

- 농번기 공동급식 지원사업은 농번기 농촌 일손부족을 해결하고,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근로여건을 개선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 지원대상은 공동급식 기반시설을 갖춘 마을 중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농가가 20인 이상인 마을로 예산 범위내 지원
 - 2018년도에는 300개 마을에 조리원 인건비와 부식비를 年 40일간 240만원을 지원하였음
- 2019년 3월부터 500개 마을로 확대하여 年 320만원으로 상향 지원함

현행	확대
300개 마을 공동급식 지원 (연 240만원/마을)	500개 마을 공동급식 지원 (연 320만원/마을)



농번기 공동급식 지원 확대

- 추진배경 급식준비로 인한 여성농업인의 영농작업 중단으로 인한 생산성 저하, 일손부족 등으로 근로 여건 개선 필요
- 주요내용
 - 지원대상 : 마을 공동 급식시설을 구비하고, 농업인(가족포함) 20명이상 급식을 희망하는 마을
 - 지원내용 : 조리원 인건비, 부식비 지원
 - 조리원 인건비 : 40천원/일 × 40일(연간) = 1,600천원
 - 부식비 : 40천원/일 × 40일(연간) = 1,600천원
- 시 행 일 2019년 2월 1일

14

전라북도 귀농귀촌 상담 홍보전 개최

전라북도 농촌활력과 ☎ 063-280-4163

‘전라북도 귀농귀촌 박람회’가 ‘수요자 맞춤형 상담홍보전’(전라북도 귀농귀촌 상담 홍보전)으로 탈바꿈하였습니다.

- 전시성 및 홍보성 박람회 최소화
 - 전국단위 귀농귀촌박람회 년 8회 ~ 10회 개최/ 수도권 집중
 - 전시(홍보)성 지양, 정보제공, 상담 등 희망자 맞춤형 박람회 추진
- 중앙(농식품부), 언론사 등 다수 박람회 참여에 따른 애로사항 발생
 - 귀농귀촌 트렌드 변화와 차별성 한계로(방문객, 상담) 감소 추세
- 귀농귀촌 희망자 중심 상담홍보 확대 필요(행사성 지양)
 - 수도권 중심 박람회 탈피, 주요 광역시, 도시 귀농귀촌 박람회 확대

현행	개정
전라북도 귀농귀촌 박람회(연 1회)	전라북도 귀농귀촌 상담홍보전(연 5회)



전라북도 귀농귀촌 상담홍보전 개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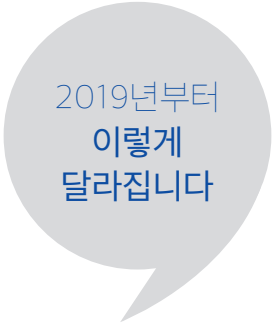
- 추진배경 박람회의 전시성을 지양하고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 수도권 외 주요대도시 귀농귀촌 희망자 대상 상담홍보 확대 필요
- 주요내용 연 5회 주요 대도시 도시민을 대상으로 귀농귀촌 상담홍보전 진행
- 시행일 2019년

이렇게
달라
집니다

IV

문화 · 예술 · 체육

01 문화누리카드 8만원으로 상향 지원.....	45
02 문화기반시설 내 문화예술교육사 배치	46
03 공 · 사립 작은도서관 운영 지원 확대	47
04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확대 운영.....	48



2019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01

문화누리카드 8만원으로 상향 지원

전라북도 문화예술과 ☎ 063-280-3305

경제적 소외 계층을 위한 문화누리카드 1인당 연간 지원금이 2019년부터 8만원으로 상향 지원됩니다.

-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은 소외계층에게 공연 · 전시 · 영화 · 도서 등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 국내여행 및 체육활동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하는 문화 · 복지사업임
 - 지원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6세이상)으로 예산범위 내 발급
 - 사용방법은 문화누리카드 가맹점 현장 결제 및 온라인 가맹점 이용 가능
- 2019년도에는 문화누리카드 1인당 연 지원금 8만원으로 상향 지원
 - 2021년까지 1인당 연 지원금 10만원으로 단계적 상향 계획

현행	→	개정
【1인당 연 지원금】 7만원		【1인당 연 지원금】 8만원



문화누리카드 발급 1인당 8만원으로 상향 지원

- 추진배경 소외계층에게 문화예술 · 여행 · 체육 분야 향유 지원으로 삶의 질 향상 및 문화격차 해소
- 주요내용 문화예술, 국내여행, 체육활동 시 사용할 수 있는 문화누리카드 발급(1인당 연간 8만원 지원)
 - ※ 미사용 금액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지 않으며, 현금 교환 불가
- 시 행 일 2019년 2월 1일

02

문화기반시설 내 문화예술교육사 배치

전라북도 문화예술과 ☎ 063-280-4847

지역 문화예술 자원(문화예술교육사, 문화기반시설)을 활용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공급(기획·창작·생산)으로 도민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합니다.

- 문화예술교육사 인턴십 지원사업은 청년 문화예술교육사의 실무경험 및 기획능력을 배양하고, 문화시설의 활용도 제고와 지역주민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새롭게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 도내 국·공립 미술관 및 박물관 등 문화기반시설에서 문화예술교육사를 활용하여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문화예술교육사란? 문화예술교육에 관한 기획·진행·분석·평가 및 교수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학력·경력을 갖춘 사람이 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문화예술교육사로 자격을 부여한 사람



2019년 문화예술교육사 인턴십 지원

- 추진배경 문화기반시설과 문화예술교육사를 연계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공급·유통기반 구축으로 지속가능한 '지역 문화예술교육 생태계' 선순환 기반 마련
- 주요내용
 - － 문화기반시설 9개소 내 문화예술교육사 배치(1개소당 1명)
 - － 인건비 및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기획·운영비 280백만원 지원
- 시행일 2019년

03

공 · 사립 작은도서관 운영 지원 확대

전라북도 문화예술과 ☎ 063-280-2493

도내 공·사립 작은도서관 지원 확대로 지역 커뮤니티 거점 조성 (공립 133개소 운영비 및 사립 71개소 도서구입비 지원)

- 주민생활밀착형 독서문화공간인 공 · 사립 작은도서관 지원 확대 노력으로 부족한 공공 도서관의 보완재 역할 및 도민 지식정보 접근성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 도내 133개의 공립 작은도서관의 안정적 운영과 전문성 위한 인건비, 프로그램운영비, 도서 구입비, 관리운영경비 등 운영비 지원 지속
- 특히 개인이 설립하고 지역주민의 자발적 참여로 운영되는 147개소의 사립 작은도서관 중 독서문화프로그램 개설 등을 통한 활성화 실적이 있는 71개소에 도서구입비를 지원, 재정적 어려움 일부 해소 및 지역 커뮤니티 거점 공간 조성



2019년 작은도서관 운영 지원 계획

- 추진배경 지역주민 누구든 지식정보를 손쉽게 접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다양한 독서교육문화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정보격차 해소 및 독서문화 증진 이바지
- 주요내용 공 · 사립 작은도서관 204개소 약 37억 지원
 - 공립 : 133개소 / 3,623백만원 (인건비 등 운영비)
 - 사립 : 71개소 / 74백만원 (도서구입비)
- 도내 작은도서관 조성 현황

구분	계	전주	군산	익산	정읍	남원	김제	완주	진안	무주	장수	임실	순창	고창	부안
계	280	101	42	32	15	23	12	15	9	4	5	7	3	7	5
공립	133	29	14	17	14	12	8	9	6	4	4	7	2	5	2
사립	147	72	28	15	1	11	4	6	3	0	1	0	1	2	3

04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확대 운영

전라북도 체육정책과 ☎ 063-280-3327

체육활동이 어려운 도내 장애인에게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를 배치하여 지속적으로 체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합니다.

- 생활체육지도자를 종목별 시도별 배치하여 지역 내 장애인들의 생활체육 참여율을 높이고 체계적인 지도를 통한 생산적 복지 구현
 - 찾아가는 생활체육서비스와 연계하여 재가 장애인 및 체육활동 참여 희망자를 적극 발굴하여 스스로 참여 유도하고 생활체육을 확대 보급하고자 함

현행

14개 시·군
20명



확대

14개 시·군
30명



생활체육지도자 확대 운영 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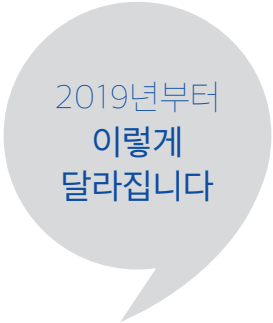
- 추진배경 13만 전북 장애인들의 생활체육 참여율을 높여 건강하고 생산적인 삶을 누리도록 하고자 함
- 주요내용
 - ① 장애인들의 생활체육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일상적인 생활영역에 고정 배치 및 순회 방문하여 체계적인 생활체육 지도
 - ② 종목별지도자는 생활체육 초보교실운영 및 동호회 육성
- 시행일 2019년 1월 2일

이렇게 달라 집니다



복지·여성·보건

01 전북형 기초생활보장제 실시	51
02 자활장려금 지원	52
03 부모부담 차액보육료 지원액 인상	53
04 공공형 어린이집 교육환경개선비 지원	54
05 한부모가족 생활안정 지원	55
06 「아이돌봄지원사업」서비스 단가 인상 및 지원시간 확대	56
07 기초연금·장애인연금 저소득층 대상 조기 인상	57
08 장애등급제 폐지 및 맞춤형 지원체계 도입	58
09 다문화이주민플러스센터 운영	59
10 치매노인 공공후견 사업	60
11 정신건강복지센터 확대 운영 및 자살예방 심리지원	61
12 출산취약지역 임산부 이송 지원 확대	62
13 일반건강검진사업 대상 확대	63
14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사업 확대	64
15 식품미생물 시험·검사 수수료 인상	65
16 법정감염병 5종 추가 확인진단 시행	66



2019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01

전북형 기초생활보장제 실시

전라북도 사회복지과 ☎ 063-280-4767

부양의무자 기준 등으로 생계급여 수급자에서 탈락하는 기준중위소득 30% 이하 세대에게 생계급여를 지원합니다.

- 기존에는 생활수준은 기준중위소득 30% 이하로 매우 어려운 실정이나 부양의무자 기준 등으로 인해 생계급여 수급자에서 탈락하여 최저생계 보호를 받지 못하는 빈곤층 발생
- **현행 보건복지부 부양의무자 기준보다 완화하여 생계급여 수급자 지원액의 30~40% 수준의 생계급여 지원**

현행

부양의무자 기준 등으로 생계급여 수급자에서 탈락하여 복지사각지대 발생



확대

- ①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 ② 복지부 생계급여 지원액의 30~40% 수준 생계급여 지원



전북형 기초생활보장제 실시

- 추진배경 생활수준은 어려운 실정이나 부양의무자 기준 등 법정요건이 맞지 않아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비수급 빈곤층에게 최소한의 생활보장 필요
- 주요내용 ① 현행 보건복지부 부양의무자 기준보다 완화
② 복지부 생계급여 지원액의 30~40% 수준 생계급여 지원
- 시행일 2019년 7월 1일

02

자활장려금 지원

전라북도 사회복지과 ☎ 063-280-4676

생계급여 수급자의 근로의지를 높이고 자활일자리 참여를 유도해 소득증가와 탈수급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자활장려금을 지급합니다.

- 자활사업에 참여하여 얻은 자활근로소득 30%를 자활장려금으로 추가 지급
 - 자활소득의 30%가 생계급여 지급 필요액보다 높을 경우 생계급여 지급액과 동일금액으로 지급



자활장려금 지원사업

- 추진배경 자활사업 참여로 인한 가계수입 상승과 기초생활수급자의 근로의욕 감퇴를 예방하여 빈곤층의 실질적인 자립·자활 도모
- 지원대상 시장진입형(자활기업 포함), 인턴도우미형, 사회서비스형 사업단 등 자활근로에 참여하는 생계급여 수급자
- 지원내용 자활사업에 참여하여 얻은 자활 소득 30%를 자활장려금으로 추가 지급(지급일 : 매월 20일)
< '19년 4인가구 생계급여 산정기준 1,384,061원, 자활급여 월1,200,000원 시 >
 - (기존) 생계급여 1,384,061원 지급(자활급여가 100% 소득인정액에 반영·차감)
 - (변경) 4인가구 총 지급액이 1,744,061원으로 자활장려금 360,000원만큼 증가
 - 자활급여 1,200,000원, 자활장려금 360,000원(=120만원x30%), 생계급여 184,061원*

* 생계급여 지급 필요액 544,061원(=생계급여 산정기준(1,384,061원)-소득인정액(0.7x1,200,000원) 중 자활장려금 360,000원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184,061원을 생계급여로 지급
- 신청방법 시·군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시행일 2019년 1월중

03

부모부담 차액보육료 지원액 인상

전라북도 사회복지과 ☎ 063-280-2424

정부미지원 어린이집 3~5세 아동의 부모들이 부담 중인 차액보육료 지원액이 인상됩니다.

현행	개정
【차액보육료 1인당 지원액】 월 1만원	【차액보육료 1인당 지원액】 월 1만5천원

* 차액보육료란?

3~5세 유아에게 지원하는 정부지원 부모보육료 22만원과 도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정한 보육료 수납한도액과의 차이를 뜻하며, 어린이집마다 수납한도액 범위 내에서 차액보육료를 정하여 부모로부터 수납



부모부담 차액보육료 지원액 인상

- 추진배경 정부인건비 미지원 민간·가정 어린이집 3~5세반 재원아동은 보육료 수납한도액 범위 내에서 차액보육료를 납부하게 되며, 부모 보육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차액보육료 일부를 지원
- 주요내용 부모부담 차액보육료 1인당 지원액 인상
* (기존) 월 1만원 → (개정) 월 1만5천원
- 시행일 2019년 1월 1일 이후

04

공공형 어린이집 교육환경개선비 지원

전라북도 사회복지과 ☎ 063-280-4761

공공형 어린이집의 보육 품질관리를 위해 교육환경 개선비를 지원합니다.

- 지원대상 : 42개소(민간어린이집 23, 가정어린이집 19)

- 지원액 : 민간 어린이집 300만원/연, 가정어린이집 200만원/연

* 공공형 어린이집이란?

- 민간·가정 어린이집 중 우수 어린이집을 공공형으로 지정·운영하여 공보육 기반 구축
- 공공형 어린이집은 3년마다 재선정되며, 재선정 시기가 매년 연말에 이루어지므로 재선정 다음 해에 교육환경 개선비 지원



공공형 어린이집 교육환경개선비 지원

- 추진배경 : 전년도 재선정 공공형어린이집에 교육환경 개선비를 지원하여 국공립 수준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 주요내용 : - 재선정 공공형 어린이집 보육 품질관리를 위해 교육환경 개선비(소규모 수선·교재교구비) 지원
- 지원액 : 민간어린이집 3,000천원/연, 가정어린이집 2,000천원/연
- 시행일 : 2019년 1월 1일 이후

05

한부모가족 생활안정 지원

전라북도 여성청소년과 ☎ 063-280-2522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을 위해 아동지원연령을 확대하고 복지급여액(아동양육비)이 늘어납니다.

현행	개정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만14세 미만, 월 13만원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만18세 미만, 월 20만원
【청소년한부모(만24세 이하)】 월 18만원	【청소년한부모(만24세 이하)】 월 35만원



한부모 가족 지원대상 확대 및 양육비 증가

- 추진배경 저소득 한부모가족이 가족기능을 유지하고,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 사업 확대
- 주요내용 복지급여액 증액 및 아동지원연령 확대
- 시행일 2019년 1월 1일

06

'아이돌봄지원사업,서비스 단가 인상 및 지원시간 확대

전라북도 여성청소년과 ☎ 063-280-2524

아이돌봄서비스의 정부지원금 지원대상과 지급시간을 확대, 아이돌보미에게는 서비스 시간당 단가를 인상하고 근로기준법상 법정수당을 지급합니다.

- 부모의 맞벌이 등의 사유로 양육공백이 발생하는 가정의 만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찾아가는 아이돌봄서비스의 정부지원금 지원대상과 지급시간을 확대하였습니다.
- 아울러 아이돌보미에게는 서비스 시간당 단가 인상과 근로기준법 상 법정수당을 지급합니다.

〈이용자 대상〉

현행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금 지원대상】 중위소득 120% 이하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금 지급시간】 연 600시간



확대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금 지원대상】 중위소득 150% 이하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금 지급시간】 연 720시간

〈아이돌보미 대상〉

현행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시간당 단가】 7,800원
신설



확대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시간당 단가】 8,400원
아이돌보미에게 근로기준법상 법정수당 지급 (주휴, 연차, 연장근로수당)

예) 주 15시간 미만 근무시 시간당 급여 8,400원(돌봄수당)
주 15시간 이상 근무시 시간당 급여 10,080원(돌봄수당 + 주휴수당)

07

기초연금·장애인연금 저소득층 대상 조기 인상

전라북도 노인장애인복지과 ☎ 063-280-2462, 2521)

기초연금 기준연금액과 중증장애인의 기초급여액이 소득하위 20~30% 대상으로 30만원까지 인상됩니다.

- 기초연금·장애인연금의 조기 인상으로 저소득층의 소득분배 개선 및 소득보장이 강화됩니다.
 - (기초연금) 저소득층 노후소득보장 강화를 위한 기준연금액 조기인상(소득하위 20% 25→30만원)
 - (장애인연금) 중증장애인의 소득하위 30%(생계·의료급여수급자) 대상 기초급여액 조기인상 (25→30만원)

현행	확대
<p>【기초연금·장애인연금】 단독가구 기준 25만원</p>	<p>【기초연금(단독가구 기준)】 (소득하위 20%) 30만원 (소득하위 21~70%) 25만원</p> <p>【장애인연금(단독가구 기준)】 (소득하위30%) 30만원 (소득하위30%를 제외한 연금대상) 25만원</p>



기초연금·장애인연금 조기 인상

- 추진배경 저소득층에 대한 연금 조기 인상으로 소득 분배 개선
- 주요내용
 - ① 기초연금 수급자 중 소득하위 20%이하 25만원에서 최대 30만원으로 조기인상(단독가구 기준)
 - ② 장애인연금 수급자 중 생계·의료급여수급자(소득하위 30%)의 기초급여액을 25만원에서 30만원으로 조기 인상
- 시행일 2019년 4월

08

장애등급제 폐지 및 맞춤형 지원체계 도입

전라북도 노인장애인복지과 ☎ 063-280-2521

장애인에게 1급부터 6급을 부여하던 장애등급제가 폐지되고, 장애의 정도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중전 1~3급)'과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4~6급)'으로 구분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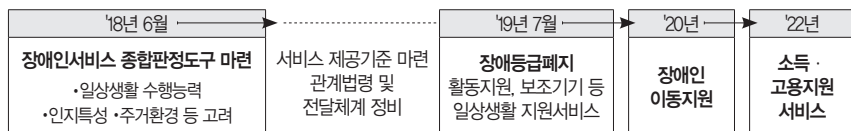
- 장애인의 구분은 장애정도가 심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로 단순화하여 서비스를 지원할 때 참고자료로만 활용하고, 주요 서비스의 수급자격은 별도의 자격심사를 통해 결정함으로써 꼭 필요한 장애인이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 ① 장애인을 장애의 정도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구분합니다.
 - ② 활동지원급여,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 장애인 거주시설 이용, 응급안전서비스를 신청하는 경우 서비스 필요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종합조사'를 통해 수급자격과 급여량이 결정됩니다.
 - ③ 이미 등록된 장애인이라면 심사를 다시 할 필요가 없습니다.
 - 2019년 7월부터 장애등급이 없어지지만 기존의 1~3급 장애인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4~6급 장애인은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그대로 인정되기 때문에, 장애심사를 다시 받거나 장애인 등록증을 새로 발급 받아야 할 필요는 없음



장애등급제 폐지 및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도입

- 추진배경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통해 서비스를 지원함으로써 꼭 필요한 장애인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 주요내용 장애등급제 폐지되고 장애인 중심의 맞춤형 지원체계를 단계적으로 확대 도입



- 시 행 일 2019년 7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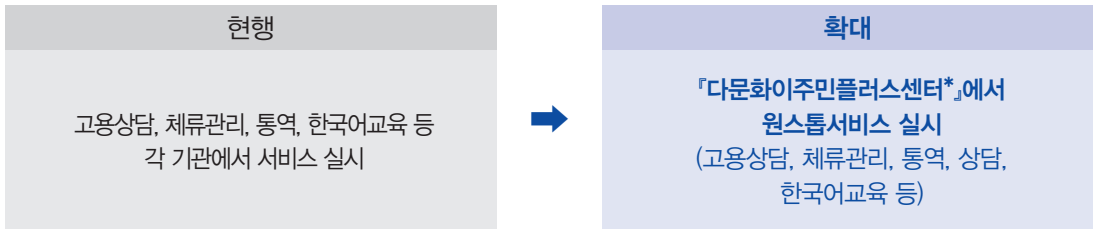
09

다문화이주민플러스센터 운영

전라북도 국제협력과(☎ 063-280-2815)

다문화가족과 외국인에게 고용상담, 체류관리, 통역, 상담, 한국어교육 등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기존에는 각 관련부처를 방문하여 고용상담, 체류관리, 통역, 상담, 한국어교육 등의 서비스를 제공 받았으나, 『다문화이주민플러스센터』 운영으로 원스톱서비스 이용가능
- 관련부처(여가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법무부 출입국관리소, 고용부 고용센터, 지자체·외국인 주민지원센터 등)의 업무를 다문화이주민플러스센터(전주시, 익산시)에서 서비스 실시



* 전주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2층), 익산시(익산역 3층)



다문화이주민플러스센터 운영

- 추진배경 언어문제와 정보부족으로 필요한 서비스를 받기 어려운 외국인 주민에게 생활 불편사항 해소 하고 안정적인 근로환경 제공 및 정주여건 개선으로 체류인구 확대
- 주요내용 다문화가족과 외국인을 대상으로 고용상담, 체류관리, 통역, 상담, 한국어교육 등 원스톱서비스 실시 - 전주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2층), 익산시(익산역 3층)
- 시 행 일 2019년 2월 1일 (예정)

10

치매노인 공공후견 사업

전라북도 보건의료과 ☎ 063-280-4688

의사결정 능력이 부족한 치매노인들은 성년후견제도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성년후견 지원이 필요한 치매노인*에 대하여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60세이상)로서 법원에서 공공후견인으로 선임된 자’가 치매노인의 통장관리와 의료행위에 대한 동의 등을 도와줍니다.

* 65세이상 중등도 이상의 치매이면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자, 가족이 없는 경우 등

현행

치매노인이 통장관리와 의료행위 동의 등 신상 결정에 한계가 있음



신설

- ① 성년후견 지원이 필요한 치매노인이 공공후견제도를 이용할 수 있음
- ② 노인일자리 참여자(60세이상)로서 법원에서 선임된 자가 공공후견인으로 치매노인의 재산관리 등 지원



치매노인 공공후견 사업

- 추진배경 급속한 고령화로 치매유병율은 증가추세이며, 의사결정 능력이 부족한 치매어르신은 기초연금·생계급여 등 통장관리와 의료행위에 대한 동의 등 신상결정에 제약이 많음
- 주요내용
 - － 치매어르신의 통장관리와 의료행위에 대한 동의 등에 성년후견제 지원
 - － 60세이상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로서 법원에서 공공후견인으로 선임된 자가 치매 노인의 통장관리 등 지원
- 시 행 일 2018년 9월 20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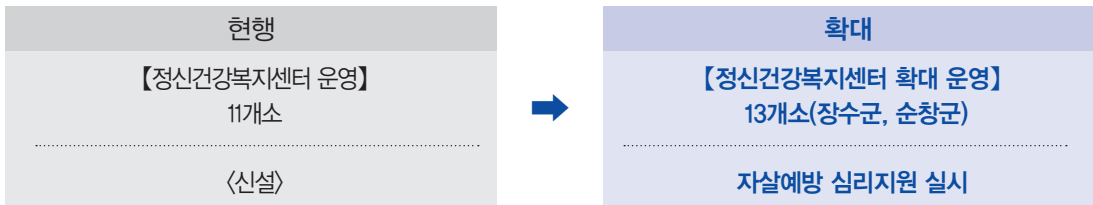
11

정신건강복지센터 확대 운영 및 자살예방 심리지원

전라북도 보건의료과 ☎ 063-280-2434

스트레스, 불안장애, 기분장애, 정신증 등 정신건강복지센터를 통해 정신건강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 2019년부터 장수군, 순창군에 정신건강복지센터 확대 운영(11개소→13개소)
- 자살예방 심리지원 실시
 - 인구 20만 이상 시(전주, 군산, 익산)에 '자살예방 심리지원팀'을 신설하고 그 외 지역에 담당자 배치
 - 응급 · 정신 치료비, 심리검사비, 심리상담, 맞춤형 프로그램 등 실시
※ 자살고위험군 1인 100만원 이내 지원(우선지원대상: 수급자, 차상위)



정신건강복지센터 확대 운영 및 자살예방 심리지원

- 추진배경 2017년 전라북도 자살률(10만명당)은 28.4명으로 자살사망자 감축을 위해 고위험군 집중관리 방안을 모색하여 정신건강복지센터 확대운영 및 자살예방 심리지원 실시
- 주요내용
 -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확대 [11개소 + 장수군 · 순창군 → 13개소]
 - 자살예방 심리지원 실시
 - 전주시, 군산시, 익산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내 '자살예방 심리지원팀' 설치
 - 자살예방 심리지원(응급 · 정신 치료비, 심리검사비, 심리상담, 맞춤형 프로그램 등) 실시
 - ※ 자살고위험군 치료비 1인 100만원 이내 지원(우선지원대상: 수급자, 차상위)
- 시 행 일 2019년 1월 1일

12

출산취약지역 임산부 이송 지원 확대

전라북도 보건 의료과 ☎ 063-280-4690

분만 가능한 산부인과가 없는 출산취약지역 임산부의 안전한 분만을 위해 임산부 이송 지원 대상 및 횟수가 확대 실시됩니다.

- 출산취약지역 임산부 이송 지원 확대 실시
 - 임산부 지원 대상 확대
 - 임신 24주 이상에서 분만까지 → 임신 16주 이상에서 분만까지
 - 임산부 이송지원 횟수 증가
 - 5회(산전진찰 4, 분만 1) → 9회(산전진찰 8, 분만 1)
 - ※ 지원기준 : 분만 1회 10만원, 산전진찰 1회당 4만원

현행		확대
임신 24주 이상부터 분만까지	➡	임신 16주 이상부터 분만까지
지원 횟수 5회 (산전 진찰 4, 분만 1)		지원 횟수 9회 (산전 진찰 8, 분만 1)

출산취약지역 임산부 이송 지원 확대

- 추진배경 분만 가능한 산부인과가 없는 출산취약지역 임산부의 안전 분만을 위한 이송 지원 필요
- 주요내용 임산부의 산전 진찰 및 분만 이송에 따른 교통비 지원
 - ① 임산부 이송지원 대상 : 임신 16주 이상부터 분만까지
 - ② 지원 횟수 : 9회(산전진찰 8, 분만 1)
 - ③ 지원 기준 : 분만 1회 10만원, 산전진찰 1회당 4만원
- 시 행 일 2019년 1월 1일

13

일반건강검진사업 대상 확대

전라북도 건강안전과 ☎ 063-280-3507

20~30대 의료급여수급권자 세대원까지 일반건강검진사업 대상자로 확대됩니다.

- 기존에는 일반건강검진사업 대상자로 만19~64세 세대주, 만 40~64세 세대원, 만 66세이상 세대주 및 세대원으로 한정하여 검진을 받았지만, 2019년부터는 만19~39세 세대원까지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음

현행	확대
【일반건강검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만19~64세 세대주· 만40~64세 세대원· 만66세 이상 세대주 및 세대원	【일반건강검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만19~64세 세대주· 만40~64세 세대원· 만19~39세 세대원· 만66세 이상 세대주 및 세대원



일반건강검진사업 대상 확대

- 추진배경 취업경쟁과 고용불안 등으로 청년세대가 스트레스로 고통받고 있는 가운데 건강문제가 없을 것 같던 청년세대도 건강 문제에 상당히 노출되어 있어 검진의 필요성 제기
- 주요내용 만19~39세 세대원의 일반건강검진사업 대상 확대
- 시행일 2019년 1월 1일

14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사업 확대

전라북도 건강안전과 ☎ 063-280-3507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을 하위 30% 이하인 자에서 하위 50% 이하인 자로 확대하였습니다.

- 기존에는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을 건강보험료 부과금액 하위 30% 이하인 자에 대하여 최대 20만원을 지원하였으나, 2019년부터는 하위 50% 이하인 자로 확대하였음.

현행		확대
건강보험료 부과금액 하위 30% 이하인 자 최대 20만원	➡	건강보험료 부과금액 하위 50% 이하인 자 최대 20만원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사업 확대

- 추진배경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는 그간 건강보험료 부과금액 하위 30% 이하인 자에 대하여 최대 20만원을 지원하였으나, 사업대상자가 저조하여 대상 확대 필요
- 주요내용 건강보험료 부과금액 하위 50% 이하인 자로 확대
- 시행일 2019년 1월 1일

15

식품미생물 시험·검사 수수료 인상

전라북도 보건환경연구원 미생물과(☎ 063-290-5226)

식품미생물검사 통계적 개념 전면 시행 및 물가 상승을 반영에 따라 시험 · 검사 수수료가 인상됩니다.

- 식품미생물 시험 · 검사법의 개정에 따라 원가산출 근거를 반영하여 수수료를 현실화하여 현행 규정의 미비점을 개선 ·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 기존 1개의 시료검사(n=1)에서 5개의 시료검사(n=5)로 하는 통계적 개념의 미생물 규격 전환
 - 수수료 제정('03년) 이후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수수료 인상이 없었음



식품 미생물 시험·검사 수수료 인상

- 추진배경 시험검사법 개정 및 물가상승에 따른 수수료 인상
- 시행일 2019년 6월 1일(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후 시행예정, 변경가능)

구분	수수료(원)	
	기존	개정
(1) 대장균군, 일반세균수, 유산균수, 대장균, 진균수(1항목당)	13,000	19,900
(2) 대장균군, 일반세균수, 대장균(n=5)(1항목당)	13,000	43,600
(3) 식중독균 검사		
① 살모넬라, 장출혈성 대장균, 장염비브리오, 황색포도상구균,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1항목당)	15,000	29,000
② 살모넬라, 장출혈성 대장균, 장염비브리오, 황색포도상구균,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n=5)(1항목당)	15,000	64,900
③ 여시니아 엔테로콜리티카(n=5)(1항목당)	13,000	47,700
④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 클로스트리디움 보툴리눔(n=5)(1항목당)	20,000	40,200
⑤ 캄필로박터 제주니/콜리(n=5)	22,000	46,500
⑥ 크로노박터(n=5)	(산설)	38,300
⑦ 바실러스 세레우스(정량검사)	90,000	52,800
⑧ 바실러스 세레우스(정량검사, n=5)	90,000	225,700
⑨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 황색포도상구균, 장염비브리오(정량검사)	15,000	36,100
⑩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정량검사, n=5)	80,000	143,900
⑪ 황색포도상구균(정량검사, n=5)	15,000	65,000
(4) 세균발육 시험	12,000	27,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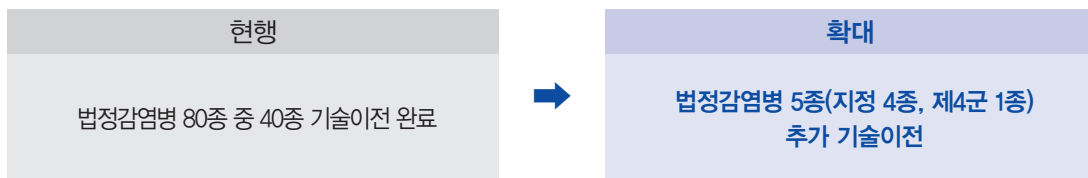
16

법정감염병 5종 추가 확인진단 시행

전라북도 보건환경연구원 감염병검사과 ☎ 063-290-5331

법정감염병 5종에 대한 검사 확대 시행

- 법정감염병 5종(지정 : 이질아메바 감염증, 람블편모충 감염증, 작은와포자충 감염증, 원포자충 감염증 및 제4군 : 라임병)에 대한 검사를 추가 시행합니다.
- 보건환경연구원 검사 가능 감염병의 확대를 위한 지속적인 기술이전 계획에 따라 법정감염병 발생에 대한 지자체 실험실 검사(확인진단) 능력 강화



법정감염병 5종 추가검사 시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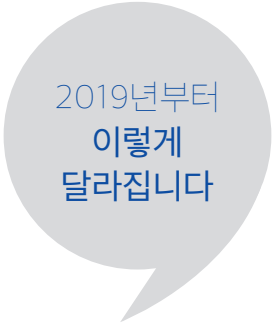
- 추진배경 법정감염병 발생에 대한 지자체 실험실 검사(확인진단) 능력 강화
- 주요내용
 - 대상 : 법정감염병 5종(지정 4종, 제4군 1종)
 - 항목 : 이질아메바 감염증, 람블편모충 감염증, 작은와포자충 감염증, 원포자충 감염증, 라임병
- 시행일 2019년 1월 1일

이렇게 달라 집니다

VI

환경·녹지

01 어린이집에 대한 건축물 석면조사 면적기준 폐지	69
02 물놀이형 수경시설 신고대상 확대	70
03 가축분뇨 전자인계관리시스템 사용 의무대상 확대.....	71
04 액비화 부속도 기준 적용시설 확대	72
05 산지 내 태양광발전시설 억제를 위한 제도개선	73
06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대상 품목 확대	74
07 산림복지소외자에 대한 산림복지 체험기회 확대	75
08 해외산림인턴 참여자격 완화.....	76
09 특별관리임산물(산양삼) 포장규격 완화	77
10 자연휴양림 등급제도 실시.....	78
11 먹는물 수질감시항목 자연방사성물질 라돈 추가 검사.....	79
12 토양오염물질 신규 지정 등	80
13 수질오염물질 지정 등에 관한 지침 추가 시행	81
14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변경 등	82



2019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01

어린이집에 대한 건축물 석면조사 면적기준 폐지

전라북도 환경보전과 ☎ 063-280-3521)

어린이집 소유자는 건축물 연면적에 관계없이 의무적으로 건축물 석면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 어린이집 건축물 석면조사 대상이 확대되어 현재 어린이집에 적용되고 있는 연면적 430㎡ 이상의 현행 기준을 폐지하여 연면적 관계없이 모든 어린이집이 석면조사 대상에 포함됩니다.
- 연면적 430㎡미만 어린이집 건축물 소유자는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2019.5.29.)로부터 1년 이내에 석면조사기관으로 하여금 건축물 석면조사를 실시하여야 함
- 건축물석면조사결과, 석면건축자재가 사용된 면적의 합이 50㎡이상, 석면이 1%를 초과하여 함유된 분무재 또는 내화피복재를 사용한 건축물은 석면 건축물로 지정 관리되어야 함

현행	확대
【어린이집 건축물 석면조사 대상】 연면적 430㎡이상	【어린이집 건축물 석면조사 대상】 연면적 관계없이 실시



어린이집 건축물 석면조사 면적기준 폐지

- 추진배경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개정 · 시행에 따라 소규모 어린이집에 대한 건축물 석면조사 의무화
- 주요내용 연면적 430㎡미만 어린이집은 관련 조항 시행일(2019.5.29.)부터 1년 이내에 건축물 석면조사를 실시하여야 함
※ 현재는 430㎡이상 어린이집만 건축물 석면조사대상임
- 시 행 일 2019년 5월 29일(1년 이내 실시)

02

물놀이형 수경시설 신고대상 확대

전라북도 물환경관리과 ☎ 063-280-3555

공동주택, 대규모 점포 등에 설치된 물놀이형 수경시설 등을 관리 대상에 포함합니다

- 기존 신고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공동주택과 대규모 점포 등에 설치·운영하는 물놀이형 수경시설이 신고 대상에 포함됩니다.
 - 신고 대상 공동주택(주택법 제2조제3호)
 - 아파트 :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 층 이상인 주택
 - 연립주택 :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를 초과하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
 - 다세대주택 :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 이하이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
 - 신고 대상 대규모 점포(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
 - 대형마트,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 복합쇼핑몰, 그 밖의 대규모점포
[상시 운영 되고 매장면적의 합계 3,000㎡(용역 제공 장소 제외) 이상인 점포의 집단]

현행	개정
<p>민간 물놀이형 수경시설 신고 대상 (물환경보전법 제61조의2)</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 2. 관광지 및 관광단지 3. 도시공원 4. 체육시설 5. 어린이놀이시설 	<p>민간 물놀이형 수경시설 신고 대상 (물환경보전법 제61조의2)</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 2. 관광지 및 관광단지 3. 도시공원 4. 체육시설 5. 어린이놀이시설 6. 공동주택 7. 대규모점포 8.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물놀이형 수경시설 신고 대상 확대

- 추진배경 공동주택, 대규모점포 등에 설치된 물놀이형 수경시설 등을 관리대상에 포함하여 시설 이용자들이 수질 등이 깨끗한 물놀이형 수경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 주요내용 물환경보전법 제61조의2
- 신고기관 전라북도지사
- 시행일 2019년 10월 17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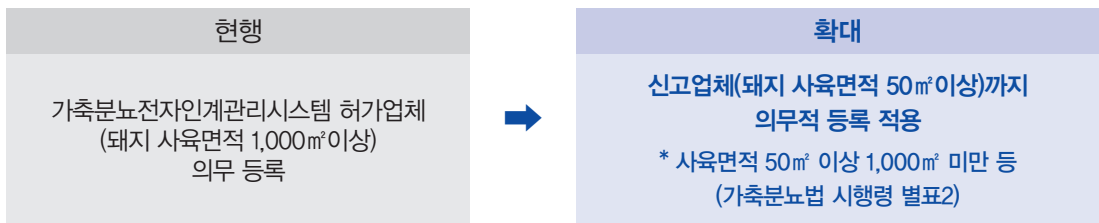
03

가축분뇨 전자인계관리시스템 사용 의무대상 확대

전라북도 물환경관리과(☎ 063-280-4458), 새만금수질개선포(☎ 063-280-3570)

돼지분뇨의 배출부터 처리까지 모든 과정을 실시간으로 관리하는 전자인계관리 시스템의 적용대상이 신고업체까지 확대됩니다.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7조의3(2017.1.1.시행)에 따라 2년간 유예되었던 신고대상 배출시설(양돈농가)의 가축분뇨 전자인계시스템 사용이 2019년 1월 1일부터 의무화됩니다.
- 가축분뇨 전자인계관리시스템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돼지분뇨 및 액비 수집 · 운반 · 살포차량에 위성항법장치(GPS), 중량센서, 영상장치를 부착하여 가축분뇨의 발생부터 처리까지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 돼지분뇨는 가축분뇨 중 발생량이 가장 많고 고농도 · 난분해성의 특성이 있어 불법처리로 인한 수질 및 토양오염, 악취 등 환경문제의 우려가 크기 때문에 전자인계관리시스템의 확대 적용을 통한 철저한 관리가 기대됨



가축분뇨 전자인계시스템 사용 의무대상 확대

- 추진배경 가축분뇨 및 액비의 배출부터 처리까지 전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환경오염을 사전 예방
- 주요내용
 - 돼지분뇨 또는 돼지분뇨로 만드는 액비 배출시설 신고자는 가축분뇨 전자인계시스템 사용 의무화 대상으로 확대 적용되어 전자인계서를 작성하여야 함
 - 이를 위반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임
- 시 행 일 2019년 1월 1일

04

액비화 부속도 기준 적용시설 확대

전라북도 물환경관리과 ☎ 063-280-4458

신고대상 배출시설(폐지, 찻소)에서 액비를 자원화 하는 경우 액비 부속도 기준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2019년 3월 25일부터 액비 부속도 적용 자원화(액비) 시설의 범위가 허가대상 배출시설, 재활용신고자 및 가축분뇨처리업자가 설치한 자원화(액비)시설에서 모든 자원화(액비) 시설로 확대 적용됩니다.

현행	개정
액비화 부속도 적용 시설 (*17.3.25. 이후) 1. 허가대상 배출시설의 액비화시설 2. 재활용신고자 및 가축분뇨처리업자가 설치한 액비화시설	액비화 부속도 적용 시설 (*19.3.25. 이후) 1. 허가대상 배출시설의 액비화시설 2. 재활용신고자 및 가축분뇨처리업자가 설치한 액비화시설 3. 신고대상 배출시설의 액비화시설

※ 가축분뇨 배출시설규모 : (폐지) 허가대상 1000㎡이상, 신고대상 50㎡~1000㎡미만
(찻소) 허가대상 900㎡이상, 신고대상 100㎡~900㎡미만



액비화 부속도 기준 적용 확대

- 추진배경 가축분뇨 사용 전 부속 과정을 통해 토양 및 비료의 성질에 따라 적절하게 사용하여 수질오염 및 악취 등 환경문제 관리
- 주요내용 허가대상 배출시설 설치자, 재활용신고자 및 가축분뇨처리업자 등이 설치한 자원화(액비) 시설을 포함하여 그 외 모든 자원화(액비)시설로 확대
- 시행일 2019년 3월 25일

05

산지 내 태양광발전시설 억제를 위한 제도개선

전라북도 산림복지과 ☎ 063-280-3123

산림 훼손 및 토사유출로 인한 산사태, 부동산 투기 현상 등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산지 보전을 강화합니다.

- 산림 훼손 및 토사유출로 인한 산사태, 부동산 투기 현상 등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산지 보전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 산지 태양광발전시설은 지목변경이 가능했으나 2018년 12월 4일부터 불가능
 -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전액 면제되었으나 2018년 12월 4일부터 전액 부과
 - 평균경사도 허가기준을 25도 이하에서 15도 이하로 강화

현행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태양광발전실 지목 변경(잡종지) -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전액 면제 - 평균경사도 허가기준 25도 이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태양광발전실 지목 변경 불가 -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전액 부과 - 평균경사도 허가기준 15도 이하

산지관리법 시행령 개정

- 추진배경 사회적 문제(산림재해 및 부동산 투기 등) 해결
- 주요내용
 - ① 지목 변경(임야→잡종지)없이 산지로 환원하는 산지일시사용제도로 전환
 - ② 면제되던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전액 부과
 - ③ 평균경사도 허가기준을 강화(25도 → 15도이하)
- 시행일 2018년 12월 4일

06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대상 품목 확대

전라북도 산림복지과 ☎ 063-280-2682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대상 품목을 포괄적으로 확대하여 단기소득 임산물을 재배하는 임업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합니다.

-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대상 품목을 포괄적으로 확대하여 단기소득 임산물을 재배하는 임업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 2019년 1월부터 관계법령에 따른 임산물을 재배하는 임업인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됨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임산물을 재배하는 임업인도 보조사업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행		확대
정해진 품목(79개)을 재배하는 임업인만 보조사업 대상자	➡	관계 법령에 따른 임산물 재배하는 임업인도 보조사업 대상자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 확대 계획

- 추진배경 현행 지원품목 외에 산림에서 생산되는 임산물을 포괄적으로 추가하여 임가소득 향상 도모
- 주요내용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대상 품목 확대
 * (기존) 79개 품목 → (개선) 79개 품목 + 「산림자원법」에 따른 임산물(목재 및 토석 제외)
- 시 행 일 2019년 1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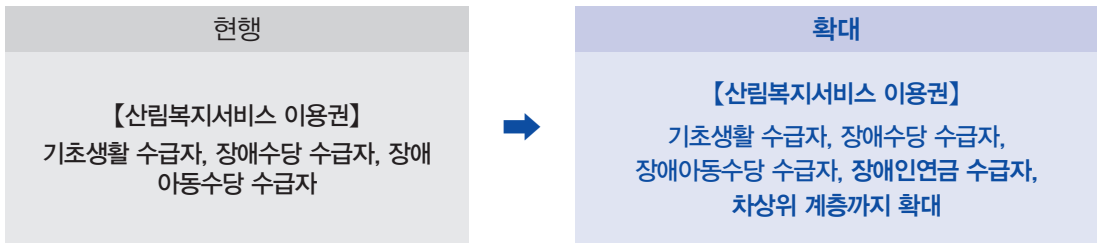
07

산림복지소외자에 대한 산림복지 체험기회 확대

전라북도 산림복지과 ☎ 063-280-4668

장애인연금 수급자, 차상위계층까지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지원대상을 확대 하여 산림복지 서비스 체험 기회를 제공합니다.

- 지금까지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은 기초생활 수급자, 장애수당 수급자, 장애아동수당 수급자를 대상으로 발급하였으나, 2019년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지원사업은 장애인연금 수급자, 차상위계층까지 확대되어 발급받을 수 있게 됨.
- 2018년 25,000명 발급에 이어 2019년에는 1만명 증가한 35,000명에게 발급예정이며, 매년 점차적으로 수혜자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 산림복지소외자 :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장애인연금 수급자, 차상위계층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지원대상 확대

- 추진배경 산림복지소외자에 대한 산림복지 체험 기회 확대
- 주요내용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지원 대상 대상자 확대 (+ 장애인연금 수급자, 차상위계층)
- 시 행 일 2018년 12월
※ 2019년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신청부터 적용

08

해외산림인턴 참여자격 완화

전라북도 산림복지과 ☎ 063-280-2663

산림관련 고등학교 졸업자의 해외산림인턴 지원자격을 완화하여 청년층의 참여를 확대합니다.

- 지금까지 산림관련 고등학교 졸업자는 산림관련업체에서 2년 이상의 종사경력이 있어야만 해외산림인턴 지원이 가능하였습니다.
- 2019년에는 산림관련업체의 2년 이상 종사경력이 없더라도 해외 산림인턴 지원이 가능하도록 개선하여 고등학교를 졸업한 청년들의 해외산림인턴 참여를 확대해 나갈 계획임.
- 또한, 해외산림인턴 참여기간을 최대 8개월에서 10개월까지 연장하여 전문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현행

【해외산림인턴 자격】
산림관련업체에서 2년 이상의 종사자



확대

【해외산림인턴 자격】
2년 이상의 경력이 삭제되고 미취업자로 변경



2019년 해외산림인턴 추진계획

- 추진배경 지원자격 완화를 통한 참여 확대 및 전문성 제고기반 마련
- 주요내용
 - ① 지원자격 완화
 - (당초) 산림관련 고등학교 졸업 후 산림관련업체 2년 이상 종사자
 - (개선) 산림관련 고등학교 졸업 후 미취업자
 - ② 최대 참여기간 확대(8개월 → 10개월)
- 시 행 일 2019년 1월 1일

09

특별관리임산물(산양삼) 포장규격 완화

전라북도 산림복지과 ☎ 063-280-2667

특별관리임산물(산양삼) 포장규격이 개선됩니다.

- 지금까지는 특별관리임산물(산양삼)의 유통 · 통관 또는 판매 시 포장 규격을 길이 20센티미터, 너비 10센티미터, 높이 3센티미터 이상의 직육면체 상자로 제한하였습니다.
- 2019년부터는 포장규격 기준을 삭제하고, 품질검사 합격증(7×10cm)을 부착할 수 있는 크기의 모든 형태의 포장 규격이 가능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현행		확대
특별관리임산물(산양삼) 포장규격 (20cm×10cm×3cm)	➡	특별관리임산물(산양삼) 포장규격 (7cm×10cm)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 추진배경 다양한 신상품 출시를 촉진하고 경쟁력 강화 및 수출 확대
- 주요내용 (특별관리임산물의 포장규격 개선 : 안 제17조의8)
 - 생산자 등이 특별관리임산물을 유통 · 통관 또는 판매하려는 경우에 길이20cm, 너비10cm, 높이3cm 이상의 직육면체 상자에 포장하여야 하던 것을 품질검사 합격증을 부착할 수 있는 크기의 상자용기에 포장할 수 있도록 규제 완화(제1항)
 - 제1항에 따른 직육면체 상자의 윗면 또는 측면에 품질검사 합격증을 붙이도록 하던 것을 상자용기에 붙이도록 개선(제3항)
- 시행일 2019년 1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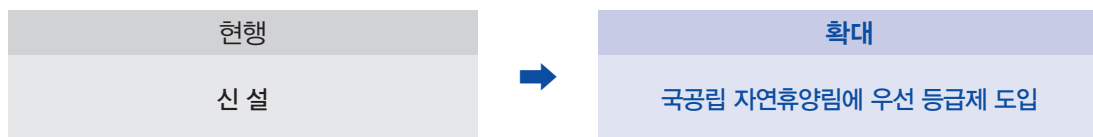
10

자연휴양림 등급제도 실시

전라북도 산림복지과 ☎ 063-280-4659

국공립 자연휴양림에 우선 등급제를 도입하는 등 자연휴양림 서비스 수준의 자발적 노력을 유도합니다.

- 1989년 첫 자연휴양림 개장 이후 많은 자연휴양림이 조성·운영되고 있으나 자연휴양림 관리자 스스로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한 노력을 유도할 제도가 없습니다.
- 2019년 산림휴양법 개정을 통해 국공립부터 적용할 예정이며, 사립 자연휴양림은 신청할 경우 등급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2019년도 자연휴양림 등급제 도입

- 추진배경 자연휴양림의 서비스 수준의 자발적 노력 유도
- 주요내용 ① 국공립 자연휴양림에 우선 등급제 도입
② 사립 자연휴양림은 신청에 의해 등급제에 참여 가능
- 시 행 일 2019년 10월(잠정, 개정안 법제처 심사 중)
- 현재 산림휴양법 개정안이 법제처 심사 중이며, 2019년 4월 국회 통과하면 6개월 후 시행

11

먹는물 수질감시항목 자연방사성물질 라돈 추가 검사

전라북도 보건환경연구원 먹는물검사과 ☎ 063-290-5261

상수원수가 지하수인 정수장,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에 한하여 자연 방사성물질인 라돈을 추가 검사합니다.

- 라돈은 먹는물 수질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나 먹는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먹는물 중의 함유실태를 파악하고 지속적인 관리 후 먹는물 수질기준 설정에 활용하고자 함

현행	확대
【먹는물 수질감시항목 (상수도정수)】 우라늄 등 27종	【먹는물 수질감시항목 (상수도정수)】 라돈 등 28종



먹는물 수질감시항목 추가검사 시행

- 추진배경 먹는물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지속적인 감시가 필요한 유해물질 실태파악
- 주요내용
 - 대 상 : 상수원수가 지하수인 정수장,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
 - 항 목 : 라돈
 - 선정기준 : 먹는물에서의 미량유해물질 함유실태조사와 국내 · 외에서 문제가 제기되는 물질에 대해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환경부장관에게 지정 요청
 - 검사주기 : 반기 1회(년 2회)
※ 근거 : 먹는물 수질오염항목 운영 등에 관한 고시
- 시 행 일 2019년 1월 1일

12

토양오염물질 신규 지정 등

전라북도 보건환경연구원 산업폐기물과 ☎ 063-290-5271)

토양오염물질 3종 추가 지정 및 토양오염우려·대책기준 2종 신설

- 토양오염물질 3종(크롬, 1·2-디클로로에탄, 다이옥신)이 추가로 지정되며, 이 중 2종(크롬, 1·2-디클로로에탄)에 대한 토양오염 우려기준 및 대책기준이 신설됩니다.

- 토양오염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토양오염물질 3종을 새롭게 지정하고 해당물질에 대한 토양오염 우려기준 및 대책기준 추가 적용

현행	개정
토양오염물질 21종	토양오염물질 24종 - 3종(크롬, 1·2-디클로로에탄, 다이옥신) 추가 - 토양오염 우려기준 및 대책기준 신설

-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중 유해화학물질의 제조 및 저장시설에 1,2-디클로로에탄 저장시설 추가



토양오염물질 추가 지정 및 토양오염 우려·대책기준 신설

- 추진배경 토양오염관리 강화를 위한 토양오염물질 확대 지정 및 토양오염기준 마련
- 주요내용
 - 토양오염물질 확대 지정 : 기존 21종 → 24종(크롬, 1·2-디클로로에탄, 다이옥신 추가)
 - 토양오염우려기준 및 대책기준 신설

기준	항목	1지역	2지역	3지역
토양오염 우려기준	크롬	160	720	1,300
	1·2-디클로로에탄	5	7	70
토양오염 대책기준	크롬	480	2,160	3,900
	1·2-디클로로에탄	15	20	210

-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중 유해화학물질의 제조 및 저장시설에 1·2-디클로로에탄 저장시설 추가

※ 근거 :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1, 별표2, 별표3, 별표7

- 시행일 2019년 1월 1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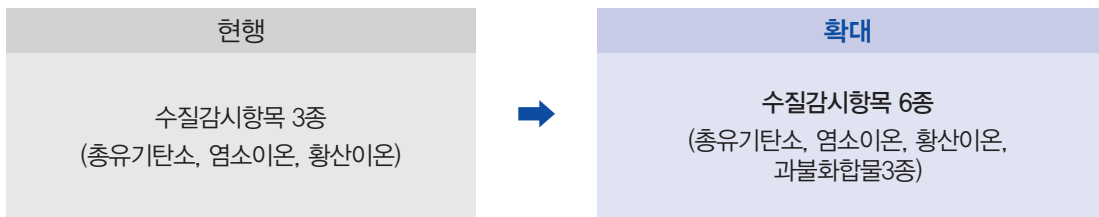
13

수질오염물질 지정 등에 관한 지침 추가 시행

전라북도 보건환경연구원 산업폐기물과(☎ 063-290-5272)

수질감시항목 과불화합물 3종 추가 검사 시행

- 수질오염물질 지정 등에 관한 지침에 따라 공공 하·폐수처리시설 및 폐수배출시설을 대상으로 과불화합물 3종(PFOS, PFHxS, PFOA)을 추가 검사합니다.
- 수질오염 예방을 위해 지속적인 감시가 필요한 미규제 유해물질의 정확한 배출상태를 파악하고, 신규수질오염물질 지정 및 배출허용기준 설정에 활용하고자 함



폐수배출시설 방류수 대상 감시항목 추가검사 시행

- 추진배경 수질오염 예방을 위해 지속적인 감시가 필요한 미규제 유해물질 실태파악
- 주요내용
 - 대상 : 공공폐수처리시설,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폐수배출시설
 - 항목 : 과불화합물 3종(PFOS, PFHxS, PFOA)
 - 선정기준 : 업종 및 규모 등을 적절하게 분배하여 선정
 - 업종별(1~82), 사업장규모별(1종~5종), 배출허용기준 적용지역구분별(청정, 가, 나, 특례)
 - 방법 : 시·도지사가 수질검사결과를 매 반기말까지 환경부에 제출
- 시행일 2019년 1월 1일

14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변경 등

전라북도 보건환경연구원 ☎ 063-290-5341)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중 미세먼지(PM10), 폼알데하이드는 기준이 강화되고, 미세먼지(PM2.5)는 권고기준에서 유지기준으로 변경됩니다.

-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중 미세먼지(PM10)는 민감취약계층 이용시설에 대해 $100 \mu\text{g}/\text{m}^3$ 에서 $75 \mu\text{g}/\text{m}^3$ 로, 폼알데하이드는 $100 \mu\text{g}/\text{m}^3$ 에서 $80 \mu\text{g}/\text{m}^3$ 로 기준이 강화되고
- 미세먼지(PM2.5)는 기준을 권고기준에서 유지기준으로 그 성격을 변경하고 지하역사나 영화상영관, 학원 등은 $50 \mu\text{g}/\text{m}^3$ 이하, 민감취약계층 이용시설의 경우 $70 \mu\text{g}/\text{m}^3$ 에서 $35 \mu\text{g}/\text{m}^3$ 로 기준이 강화됨
-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권고기준 중 이산화질소는 0.05ppm에서 0.1ppm으로 기준이 변경되며, 신축공동주택 실내공기질 권고기준 중 라돈은 기존 $200\text{Bq}/\text{m}^3$ 이하에서 $148\text{Bq}/\text{m}^3$ 이하로 기준이 강화됨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및 권고기준

• 2019년 7월 1일부터 적용되는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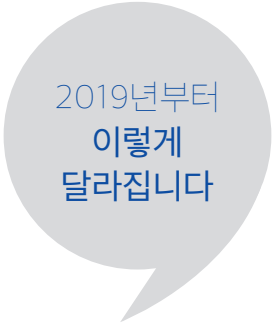
오염물질 항목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실내공기질 권고기준				
	미세먼지 (PM-10) ($\mu\text{g}/\text{m}^3$)	미세먼지 (PM-2.5) ($\mu\text{g}/\text{m}^3$)	이산화 탄소 (ppm)	폼알데 하이드 ($\mu\text{g}/\text{m}^3$)	총부유 세균 (CFU/ m^3)	일산화 탄소 (ppm)	이산화 질소 (ppm)	라돈 (Bq/ m^3)	총휘발성 유기화합물 ($\mu\text{g}/\text{m}^3$)	곰팡이 (CFU/ m^2)
가. 지하역사, 지하도상가, 철도역사의 대합실, 여객자동차터미널의 대합실, 항만시설 중 대합실, 공항시설 중 여객터미널, 도서관·박물관 및 미술관, 대규모 점포, 장례식장, 영화상영관, 학원, 전시시설,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영업시설, 목욕장업의 영업시설	100 이하	50 이하	1,000 이하	100 이하	—	10 이하	0.1 이하	148 이하	500 이하	—
나. 의료기관, 산후조리원, 노인요양 시설, 어린이집	75 이하	35 이하		80 이하	800 이하				400 이하	500 이하
다. 실내주차장	200이하	—		100이하	—	250이하	0.30이하		1,000이하	500이하
라. 실내 체육시설, 실내 공연장, 업무 시설, 둘 이상의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200이하	—	—	—	—	—	—	—	—	—

이렇게
달라
집니다

VII

건설·교통·통신

01 행복콜서비스(DRT) 확대 시행	85
02 도서민 여객선 차량운임 지원 확대	86
03 도시재생 뉴딜 소규모 재생사업 시행	87
04 특별교통수단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	88
05 희망하우스 빈집 재생사업	89
06 제설장비 현대화 사업 추진	90
07 시내버스 공공와이파이 구축	91
08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	92



2019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01

행복콜서비스(DRT) 확대 시행

전라북도 교통물류도로과 ☎ 063-280-4447

부르면 달려가는 행복콜 버스·택시 서비스가 확대 시행됩니다.

- 행복콜서비스(DRT) 서비스가 14개 시·군에서 확대 시행됩니다.
- 기존 7개 시·군에서 운행되던 21대의 행복콜버스를 8개 시·군에서 약 40대로 증차하여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며, 행복콜택시 서비스도 확대 예정임

현행	개정
행복콜버스 7개 시·군 21대 운행	행복콜버스 8개 시·군 40여대 운행

행복콜서비스 확대

- 추진배경 벽지노선 버스 운행체계 개선으로 효율성 강화 및 대중교통 서비스 소외지역 제로화로 지역주민의 행복한 삶의 질 향상
- 주요내용
 - ① 기존 대형버스를 소형승합차로 대체, 예약 등에 의한 대중교통서비스
 - 전주(신규), 군산, 남원, 완주(확대), 진안, 무주(확대), 장수(확대), 임실
 - ② 택시를 활용, 버스 미운행지역에 대한 교통서비스 확대
 - 12개 시·군(전주,익산,정읍,김제,완주,진안,무주,장수,임실,순창,고창,부안)
- 시 행 일 2019년 1월 1일

02

도서민 여객선 차량운임 지원 확대

전라북도 향만공항하천과 ☎ 063-280-3377

도서민 여객선 차량운임을 1,000CC 미만은 50%, 1,600CC 미만은 30%까지 확대 지원합니다.

- 도서민이 차량을 가지고 여객선에 승선할 시에 배기량에 관계없이 20% 정률로 지원하던 차량운임을 도서민 생활편의를 위하여 소형 승용차에 대해서는 배기량에 따라 최대 50% 까지 차등 지원
 - (현행) 차량 운임 20% 정률지원
 - (확대) 2,500cc 미만 승용자동차 중 1,000cc 미만 50%, 1000cc~1,600cc 30% 확대지원

현행	→	개정
① 비영업용 국산차량 중 5톤 미만 화물차 ② 승차정원 15인 이하 승합자동차 ③ 2,500cc 미만 승용자동차 ⇒ 차량운임 20% 정률 지원		①, ② 동일 ③ 2,500cc 미만 승용자동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00cc 미만 : 50% 지원 - 1,000cc~1,600cc미만 : 30% 지원 - 1,600cc~2,500cc미만 : 20% 지원



도서민 여객선 차량운임 지원 확대

- 추진배경 도서민 생활편의를 위하여 소형 자동차에 대한 운임지원 확대 필요
- 주요내용 도서민의 기존 2,500cc 미만 승용자동차를 여객선 이용 시 20% 정률 지원하던 것을 1,000cc 미만은 50%, 1,600cc 미만은 30%까지 지원 확대
- 시행일 2019년 1월 1일

03

도시재생 뉴딜 소규모 재생사업 시행

전라북도 주택건축과 ☎ 063-280-4499

지역 공동체가 추진하는 소규모 점 단위 재생사업에 대하여 사업비를 지원해 드립니다.

- 10인 이상 지역주민(조직)이 도시재생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는 소규모 사업에 대하여 사업비를 지원(국비 5천만원 ~ 2억원)
- 집수리, 골목길, 간판정비, 담장 허물기, 주민참여 운영 마을공방·북카페·도서관 등 H/W사업 및 안전지도 만들기, 지역자산 조사, 마을공동체 행사, 주민 소식지 발간 등 S/W사업

현행	개정
신 설	① 지원금액 : 1억원~4억원(국비50%지원) ② 사업기간 : 1년~2년 ③ 제안주체 : 10인 이상 지역주민

소규모 재생사업 시행

- 추진배경 지역주민이 자발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소규모 점단위 사업에 참여하여, 주민이 도시재생 사업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지원
- 주요내용
 - ① 지역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소규모 재생사업
 - * 지역 역량강화를 위한 일반적인 교육사업은 제외, 당해 사업을 위해 필요한 주민 교육만 가능
 - ②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상 쇠퇴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 * 인구(30년간 20%이상 감소), 산업(10년간 사업체수 5%이상 감소), 주거(20년이상 노후 건축물 50%이상)지역
- 시 행 일 2019년 3월 1일

04

특별교통수단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

전라북도 교통물류도로과(☎ 063-280-3621)

14개 시·군의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 이용요금, 운행지역, 운행시간 규정을 통일하고 콜 접수와 배차업무를 광역이동지원센터로 일원화합니다.

- 14개 시·군이 제각각인 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자, 이용요금, 운행지역과 운행시간 등 운영규정이 통일됩니다.
 - 현행 시군별로 따로 정하고 있는 이용대상자, 요금, 운영시간과 지역 등 특별교통수단 이용 규정을 도에서 정하도록 제도를 정비하여 이용대상자는 도내 어느 지역이든지 혼란 없이 이용 가능
- 도내 특별교통수단의 배차신청과 배차가 전라북도 광역이동지원센터로 일원화됩니다.
 - 시·군마다 다른 방식으로 각자하고 있는 배차업무를 전라북도 광역이동지원센터로 일원화 하여 이용대상자는 거주지, 신청지역 등과 관계없이 도내 차량 중 가장 가까운 차를 배차 받을 수 있음

현행	개정
특별교통수단 운영규정 및 배차방법 14개 시·군 제각각 운영	14개 시·군 특별교통수단 운영규정을 통일하고 시군 배차업무를 광역이동지원센터로 일원화



특별교통수단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

- 추진배경 현재, 시군별로 운영하고 있는 장애인 콜 택시라고 하는 특별교통수단은 이용대상자, 요금, 운영시간 및 지역, 예약방법 등이 시군별로 제각기 달라 도내 이용자들이 많은 혼란과 불편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
- 주요내용 도에서는 이용대상자, 요금, 운행시간 및 구역 등 14개 시군의 운영규정을 통일하고, 도내 차량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콜 접수와 배차를 할 수 있는 '전라북도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
- 시행일 2019년 11월

05

희망하우스 빈집 재생사업

전라북도 주택건축과 ☎ 063-280-4372

기존 빈집 리모델링 비용을 1,2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상향지원하며 주거 취약계층에게 3~5년간 무상임대로 제공합니다.

- 빈집 소유자에게 최대 2천만원(초과비용 자부담) 리모델링 비용 지원
 -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신혼부부, 장애인, 청년, 65세 이상 노인, 귀농 · 귀촌인 등 주거 취약계층에게 5년간 무상 임대 제공

현행	→	개정
① 사업규모 : 30동 ② 지원금액 : 1,200만원 ③ 임대방식 : 주변 시세 반값임대(5년)		① 사업규모 : 80동 ② 지원금액 : 2,000만원 ③ 임대방식 : 3~5년간 무상 임대

희망하우스 빈집재생 사업 확대

- 추진배경 방치된 빈집을 새롭게 단장하여 저소득층, 한부모가정 등 주거 취약계층에게 무상 임대주택을 제공하여 주거 안정 도모
- 주요내용
 - ① 입주대상 :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신혼부부, 장애인, 청년, 65세 이상 노인, 귀농 · 귀촌인 등
 - ② 지원내용 : 빈집재생 소유자에게 최대 2천만원 지원(초과비용 자부담) 및 재생 후 입주 대상자에게 최대 5년간 무상 임대
- 시 행 일 2019년 1월 1일

06

제설장비 현대화 사업 추진

전라북도 도로관리사업소 관리과(☎ 063-290-6725)

노후화된 제설장비 현대화 사업 추진으로 도민의 안전과 재산보호

- 제설장비 대부분이 내구연한 초과 등 노후화되어 고장이 잦고, 부품 수급에 어려움이 많아서 적기에 제설을 하지 못해 도로결빙으로 출·퇴근길 교통 사고 발생 등 도민의 안전과 재산상 피해 발생 우려
 - 이상기후에 의한 기습 폭설로 피해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음.
 - 제설장비 현대화로 신속한 제설작업을 실시하여 도민의 안전과 재산 보호
- 제설개요
 - 설해대책기간 : 11월 15일 ~ 익년도 3월 15일(4개월)
 - 작업구간 : 지방도 62개노선, 1,895km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9 ~ 2023년(5개년사업)
 - 사업내용 : 제설장비 39대중 38대 교체
 - 운행장비 14대(15톤 덤프 6, 다목적차 2, 도로보수차 2, 굴삭기 2, 로우더 1, 그레이더 1)
 - 부착장비 24대(제설기 12, 살포기 12)



제설장비 현대화 사업

- 추진배경 제설장비 내구연한이 경과되고 노후화되어 고장이 잦고, 부품 수급에 어려움이 있어 제설장비 현대화사업 추진
- 주요내용 제설장비 39대 ⇒ 내구연한이 초과된 39대중 38대 교체
 - '19년 교체 장비 : 덤프 2식*, 굴삭기 1대
 - *덤프 1식 : 15톤덤프 1대 + 제설기 1대, 살포기 1대
- 시 행 일 2019년 4월 1일

07

시내버스 공공와이파이 구축

전라북도 정보화총괄과 ☎ 063-280-3014)

정부와 지자체가 협력하여 도내 시내버스에 무선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공공와이파이를 구축합니다.

- 무선인터넷이 가능하도록 도내 시내버스 800대를 대상으로 공공와이파이 설치
 - 시내버스 공공와이파이가 구축되면 시내버스 안에서도 무선 네트워크를 통해 누구나 인터넷 검색, SNS 등 모든 온라인 서비스를 무료로 이용 가능



시내버스 공공와이파이 구축 사업

- 추진배경 무선인터넷 사용에 따른 도민의 통신비 부담을 경감시키고 지역계층간 무선인터넷 사용격차를 해소하고자 함
- 주요내용
 - － 사업대상 : 도내 운행중인 시내버스 총 800대
 - － 소요비용 : 국비와 시군비 1:1 매칭 펀드방식으로 부담
 - － 추진일정
 - 1차 : '19년 1월~4월까지 인프라 구축, 5월부터 서비스 시작(270대)
 - 2차 : '19년 3월~6월까지 인프라 구축, 7월부터 서비스 시작(530대)
- 시 행 일 2019년 5월 1일

08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

전라북도 정보화총괄과(☎ 063-280-3014)

정보통신공사업 등록기준 미유지시 영업정지처분 대신 과징금 부과로 대체가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행정처분을 개선하였습니다.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5조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과징금으로 대체가 가능한 처분기준 추가(제66조제1항4호 및 제66조의2제1항)
 - <위반행위>
 - 등록기준을 유지하지 않은 경우
 - 영업정지 처분을 받거나 과징금을 부과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등록기준에 미달된 사항을 보완하지 않은 경우

현행	개정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1개월 또는 과징금 600만원 영업정지 3개월 또는 과징금 1,800만원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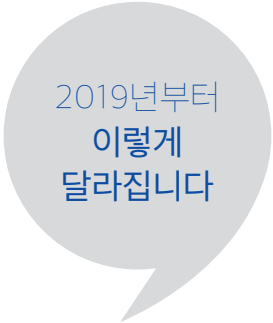
- 추진배경 정보통신공사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는 영업정지처분을 과징금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하여 업계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함
- 주요내용 법제66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기준을 유지하지 않은 경우의 영업정지 1개월 및 3개월에 갈음한 과징금의 부과기준을 각각 600만원 및 1,800만원으로 정함
- 시행일 2018년 8월 22일

이렇게
달라
집니다

VIII

경제·산업

01 전라북도 도약기업 육성 지원	95
02 국방산업 육성지원사업 지원대상 확대	96
03 수도권 전라북도 우수상품관 개설	97
04 전라북도 해외통상거점센터 구축.....	98
05 2019년 생활임금액 결정 시행.....	99
06 탄소복합재 공정장비 활용 중소기업 사업화 지원	100
07 새만금산업단지 임대용지 사용료 변경	101



2019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01

전라북도 도약기업 육성 지원

전라북도 기업지원과 ☎ 063-280-3232

전라북도 내 중소기업 중 기술혁신성을 바탕으로 고성장하고 있는 우수중소기업을 발굴하여 기업육성 프로그램을 지원합니다.

- 기업성장 단계상 초기에 해당되지만 잠재된 우수기업을 발굴하여 선도기업 이전단계 맞춤형 기업지원
 - (성장전략수립) 기업 혁신역량 강화를 위한 기술개발, 마케팅, 조직구조 최적화 등 기업 Scale-up 가능 전략수립 지원
 - (기술개발지원) 기술성숙도와 차별성을 기준으로 유형화하여 기업주도형 맞춤형 기술개발 지원
 - (마케팅지원) 전시회 참가지원, 시장 동향조사, 판로개척, IP확보 등 지원
 - (경영/품질관리) 컨설팅/정보화시스템구축/품질관리/역량강화 등
 - (기 타) 네트워킹 강화, 인력양성, 공동홍보 등 지원



전라북도 도약기업 육성사업

- 추진배경 전라북도 실정에 맞는 기업성장 사다리의 초기단계 기업발굴 및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 주요내용 성장전략수립, 기술개발지원, 마케팅, 경영·품질혁신 등
 - 사업규모 : 15개사
 - 지원대상 : 매출액 10억 ~ 50억원 미만의 도내 중소기업으로, 기업부설연구소(또는 연구 전담부서)를 보유한 기업
- 추진기관 전라북도, (재)전북테크노파크
- 시행일 2019년 1~12월

02

국방산업 육성지원사업 지원대상 확대

전라북도 기업지원과 ☎ 063-280-3228

국방분야 적용이 가능한 우수 중소·벤처기업 발굴을 위한 ‘국방산업 육성 지원 사업’을 전주시에서 전라북도 전 지역으로 확대 시행하여 도내 모든 중소기업의 사업 참여가 가능합니다.

- 전북지역의 우수 중소·벤처 기업을 발굴하여 기술 및 경영분야 지원을 통한 국방 분야 사업 역량을 갖춘 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국방분야 기술·경영지원 및 과제발굴 등을 지원
 - (경영·홍보지원) 전시회/박람회 지원, 디자인개발 지원, 홍보물 제작 지원
 - (교육·간담회지원) 경영컨설팅 지원, 워크숍/교류회/교육/세미나 지원
 - (직·간접지원) 산업재산권 취득 지원, 시험경비 지원, 사업분석 지원 등



국방산업 육성 지원사업

- 추진배경 전북지역의 우수 중소·벤처 기업들에게 기술 및 경영분야 지원을 통한 국방 분야 사업역량을 갖춘 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추진
- 주요내용 국방 분야 기술·경영지원 및 과제 발굴 지원, 협약기업 발굴
- 추진기관 전라북도, 전주시, 국방기술품질원(전주국방벤처센터), 캠틱종합기술원
- 시행일 2019년 1~12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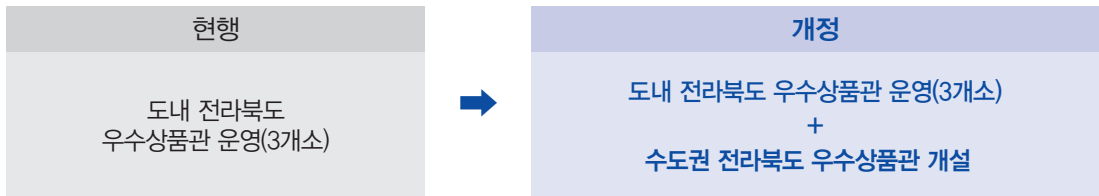
03

수도권 전라북도 우수상품관 개설

전라북도 기업지원과 ☎ 063-280-3224

수도권에 전북상품 상설 판매장을 개설하여 도내 우수상품의 판로 확대를 지원합니다.

- 도내에 위치한 전라북도 우수상품관(3개소)을 통해 우수상품 판로를 지원할 뿐 아니라 도 외에 상설 판매장을 개설하여 안정적인 수도권 판로구축
 - 수도권에 도지사인증상품 및 지역우수상품 판매 거점 센터 개설
 - 판매장 구축에 필요한 시설비 및 판촉행사비 등 지원



* 도내 전북우수상품관 : 롯데백화점, 한옥마을, 지방자치인력개발원



수도권 전라북도 우수상품관 개설

- 추진배경 전라북도지사인증상품 등 지역내 우수상품의 도외 진출 촉진과 안정적 판로 확보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수도권 전진기지 구축 필요
- 주요내용
 - ① 수도권에 전라북도 우수상품관 개설
 - ② 우수상품관 개설에 필요한 시설비 및 판촉행사비 등 지원
- 시행일 2019년 1~12월

04

전라북도 해외통상거점센터 구축

전라북도 기업지원과 ☎ 063-280-3225

해외 주요 수출 유망지역에 통상거점센터를 구축하여 도내 중소기업 판로 확대를 지원합니다.

- 해외 주요 거점에 중소기업 원스톱 수출통로 1개소 개설
 - 증가하는 온라인 마케팅 수요와 소량유통을 선호하는 바이어의 선호도를 반영한 해외 주요 거점지역 내 전복상품 전시장 및 공동 물류창고 구축



해외통상거점센터 주요내용

- 추진배경 열악한 도내 중소기업의 수출판로 확대를 위해 해외 주요 수출 유망지역에 거점센터를 구축, 수출 전문가를 통한 밀착형 해외마케팅 지원 필요
- 주요내용
 - ① 상품전시(O2O사업 연계), 물류 창고, 수출기업의 해외마케팅 사업 대행(시장조사, 바이어 발굴, 계약 지원)
 - * O2O : 온라인으로 상품을 검색하고 오프라인 매장으로 나와 직접 상품을 보고 주문
 - ② 현지 수출상담회 개최, 도내 기업 박람회 참가 지원, 수출 법률 자문 등
- 시행일 2019년 1~12월

05

2019년 생활임금액 결정 시행

전라북도 기업지원과(☎ 063-280-3968)

근로자에게 최소한의 인간적, 문화적 생활이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하고, 이를 시행하기 위해 도 및 도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에게 적용하는 **2019년 생활임금액**을 확정하였습니다.

- 2019년 1월 1일부터 도 및 도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는 '전라북도 생활임금조례'에 따라 결정된 생활임금액 시급 9,200원을 받게 됨(2018년 8,600원)
 - 앞으로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최저임금, 물가수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근로자의 임금 등을 고려하여, 전라북도 생활임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9월까지 다음연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생활임금을 결정하여야 함
 - 참고로 최저임금은 근로자가 시간당 받을 수 있는 최소 금액임. 노·사·공익 대표 각 9명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가 인상안을 제출하면 고용노동부 장관이 매년 8월 5일까지 결정해 고시함
- ☞ 2019년 최저임금은 2018년(7,530원)보다 10.9%(820원) 오른 8,350원임



2019년 적용 전라북도 생활임금액

- 목 적 최저임금 이상으로서 근로자가 최소한의 인간적, 문화적 생활을 가능하게 하기 위함
- 적용기간 2019. 1. 1 ~ 2019. 12. 31.
- 적용대상 전라북도 및 도 출자·출연기관 직접고용 소속 근로자
 - 국비 또는 시·군비 지원에 따라 일시적으로 고용된 근로자 제외
- 2019년 전라북도 생활임금 : 시급 9,200원
 - ※ 월 환산액 : 1,922,800원
 - 주 소정근로 40시간을 근무할 경우, 월 환산 기준시간 수 209시간(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 기준

06

탄소복합재 공정장비 활용 중소기업 사업화 지원

전라북도 탄소산업과 ☎ 063-280-3935

**도내 연구기관의 장비 활용을 지원함으로써 기업 신규제품 개발 및 시장진출에
힘쓰겠습니다.**

- 도내 연구기관의 장비를 활용하여 도내 탄소기업들의 신규제품 개발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기업들이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기반을 안정적으로 조성하겠습니다.
- 공모절차를 통해 지원기업을 선정하여 사업 추진



탄소복합재 공정장비 활용 중소기업 사업화 지원

- 추진배경 도내 연구기관에 구축된 탄소복합재 성형가공장비를 활용한 상용화 중심의 시제품 개발 및 시장진출 지원
- 주요내용 시제품 개발 4개 과제 지원(수요조사 후 선정 예정)
- 시행일 2019년 2~3월 중 사업 공고 예정

07

새만금산업단지 임대용지 사용료 변경

전라북도 새만금개발과 ☎ 063-280-2778)

「새만금사업법」 개정으로 “외국인투자기업”에 한하여 부여된 국·공유재산의 사용료(대부료) 감면 혜택을 2019년부터 “국내기업”에 대하여도 부여합니다.

- 기존에는 외국인투자기업의 사용료가 재산가액의 1%인 반면, 국내기업은 재산가액의 5%로 차등이 있었지만, 이제는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으로 국내기업도 외투기업과 동일하게 재산가액의 1%의 사용료 적용을 받게 됨.

※ 새만금산업단지 임대용지 확보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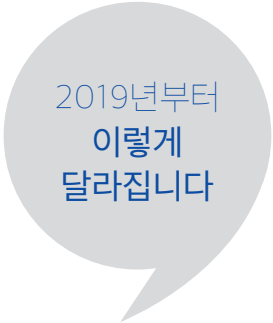
- 위 치 : 전라북도 새만금산업단지 1·2공구 내
- 사업기간 : 2018년~2019년(2년)
- 사업규모 : 660천㎡, 20만평(2018년 10만평, 2019년 10만평)
- 사업내용 : 장기임대 산업용지 조성

현행	개정
사용료 (외투기업 재산가액의 1%, 국내기업 5% 이상)	사용료 (외투·국내기업 1% 이상)



새만금산업단지 임대용지 사용료 변경

- 추진배경 국내·외 기업의 동일한 사용료 감면으로 국내기업 역차별 해소 및 새만금산업단지 임대용지 조기 분양으로 투자유치 활성화 기대
- 주요내용 「새만금사업법」 개정으로 사용료(외투기업 재산가액의 1%, 국내기업 5% 이상 → 외투·국내 기업 1% 이상) 변경
- 시행일 2019년 3월경(새만금사업법 시행령 개정 진행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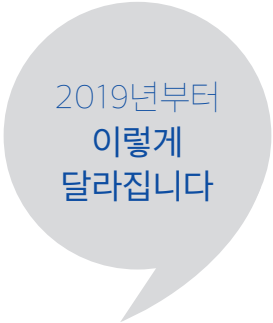
2019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이렇게
달라
집니다

IX

일반행정 · 법무

01 도민평가단 확대 운영	105
02 도 산하 공공기관 직원채용 통합공고 및 정기채용 실시.....	106
03 찾아가는 주민참여 조례개폐청구 협력지원단 운영.....	107
04 전라북도행정심판위원회 심판청구 국선대리인 운영	108



2019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01

도민평가단 확대 운영

전라북도 성과관리과 ☎ 063-280-3943

「전라북도 도민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도민평가단을 확대 운영합니다.

- 도정 운영에 도민의 참여를 보장함으로써 정책의 신뢰도를 높이고 도정의 투명성 및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해 「전라북도 도민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2018년 12월)하고 이에 따라 도민평가단을 확대 운영합니다.
 - (평가대상) 그 동안 공약사업 실천계획 수립 또는 변경 시 도민의견 수렴을 위해 도민평가단을 운영해오고 있으나, 2019년부터는 공약사업 이외에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의 대규모 사업에 대해서도 도민들의 평가를 받도록 대상을 확대
 - (위원구성) 만 19세 이상 일반도민을 대상으로 성별, 연령, 지역 등을 고루 안배하여 무작위 선발하되 공직자, 단체장의 친인척, 정당의 주요 당직자, 전·현직 선출직 공무원, 지역의 오피니언 리더 등은 제외(현행 유지)
 - (위원임기) 기존에는 필요 시 마다 3개월 정도 한시적으로 운영해 왔으나, 도정 주요업무에 대해 지속적으로 평가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위원 임기를 2년으로 확대(1회 연임 가능)



도민평가단 구성·운영 개요

- 구 성 일반도민 50명(임기 2년)
 - 만19세 이상 일반도민을 대상으로 성별, 연령, 지역 등을 고루 안배하여 선발
 - ※ 공직자, 단체장의 친인척, 정당의 주요 당직자, 전·현직 선출직 공무원, 지역의 오피니언 리더 등 제외
- 주요기능 도지사 공약사업, 500억 원 이상 도정 주요사업에 대한 평가 및 의견제시
- 운영시기 2019년 1~12월(연중 수시)

02

도 산하 공공기관 직원채용 통합공고 및 정기채용 실시

전라북도 성과관리과 ☎ 063-280-3978

취업 준비생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전라북도 공공기관 직원 채용계획」을 반기별로 통합 공고하고 정기채용을 실시합니다.

- 전라북도 산하 출연기관 및 공기업 직원 채용 시 각 기관별 수시로 진행하였으나, 채용정보에 대한 접근성 강화와 채용의 투명성·객관성을 제고하기 위해 통합공고 및 정기채용을 실시합니다.
- (정기채용) 전라북도 산하 15개 출연기관 및 공기업의 채용 계획을 모아 매년 1월과 7월 도청 홈페이지 등에 일괄 공고 및 정기채용 실시
- (필기시험) 채용전형에 필기시험을 의무적으로 실시

현행	개정
기관별 수시 채용	① 연2회 정기채용 ② 채용계획 매년 1월과 7월 일괄 공고* ③ 필기시험 의무화

* 전라북도 홈페이지, 각 기관 홈페이지, 구인·구직사이트 등



공공기관 직원채용 통합공고 및 정기채용

- 추진배경 수요자 중심의 채용 및 투명성·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전라북도 산하 출연기관 및 공기업의 직원 채용 지침 개선
- 주요내용 ① 전라북도 산하 15개 출연기관 및 공기업의 직원 채용계획을 매년 1월과 7월에 도 홈페이지 등에 일괄공고
② 채용전형에 필기시험을 의무적으로 실시
- 시행일 2019년 1월 1일

03

찾아가는 주민참여 조례개폐청구 협력지원단 운영

전라북도 법무행정과 (☎ 063-280-2143)

도민의 주민조례청구 시 입법과정에서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기 위하여 도 및 시·군, 마을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협력지원단이 운영됩니다.

- 주민 생활과 밀접한 조례의 주민 입법참여 확대를 위해 주민조례 제·개정·폐지 청구와 관련하여 도민의 주민조례청구서 작성 등 입법절차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는 ‘도와 시·군이 함께하는 협력지원체계’를 구축 운영함
 - 조례개폐청구 협력지원단 구성은 주민조례개폐청구 관련 제도의 설명 및 홍보, 주민의 입법절차 지원을 위한 도 및 시·군 법제부서(소관부서)와 주민 조례청구서 작성 시 조례개폐청구 내용에 관한 사전 검토 지원을 위한 도내 마을변호사와 관련단체 등임
 - 2019년도에 추진될 주요내용은 도내 14개 시·군을 대상으로 설명회와 현장 홍보 등으로 주민조례청구제도(주민조례발안제도) 활용방법, 전자서명 인증시스템 활용 홍보 및 조례청구 내용 사전검토, 입법절차 지원 등이 실시됨

※ 주민조례 제·개폐청구 시스템(www.ejorye.go.kr) : 공인인증서에 의한 온라인 전자서명



찾아가는 주민참여 조례개폐청구 협력지원단 운영계획

- 주요내용 주민조례개폐청구제도 관련 홍보(8회) 및 설명회(6회) 개최
 - 도, 시·군, 관계기관 협업을 통한 입법절차 지원 및 애로사항 해소
 - 마을변호사 등을 활용한 입법 관련 내용 검토 등 지원
- 지원단 도·시·군(법제부서), 전북지방변호사회(마을변호사), 지역별 단체 및 리장단 등
- 기간 2019년 2월~12월

04

전라북도행정심판위원회 심판청구 국선대리인 운영

전라북도 법무행정과 ☎ 063-280-213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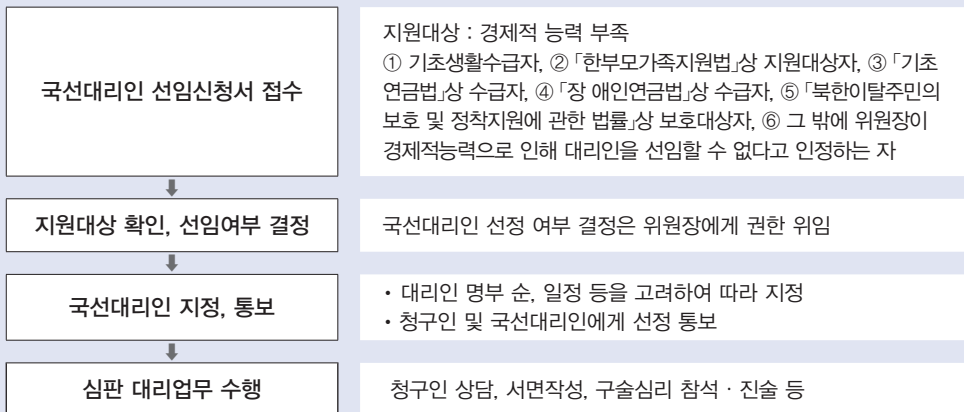
전라북도행정심판위원회는 도민의 실질적 권익보호를 위해 사회적·경제적 약자를 대상으로 법률 전문가 대리인 선임을 지원합니다.

- 도내 거주하는 사회적·경제적 약자를 대상으로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청구에 적극적으로 대응 할 수 있도록 법률 전문가로 구성된 국선대리인 선임을 지원함으로써 도민의 실질적 권익을 보호

• 신청 자격 : 경제적 이유로 대리인 선임이 곤란한 자

국선대리인 지원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 「기초연금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수급자 • 「장애인연금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수급자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보호대상자 • 그 밖에 위원장이 경제적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자
----------------	---

• 운영 흐름도



- 국선대리인의 자격(2019년1월중 선정예정)

• 「변호사법」 제7조에 따른 변호사, 「공인노무사법」 제5조에 따른 공인노무사
– 전라북도행정심판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인 자는 국선대리 업무를 할 수 없음

- 운영근거 : 행정심판법 제18조의2(국선대리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2~6

2019년 달라지는 주요제도 요약

1. 세제·부동산

구 분	현 행	달라지는 내용	관계 부서(063)
1. 지방세 체납 가산금 인하	○ 증가산금 1.2%	○ 증가산금 0.75%로 인하	전라북도 세정과 (280-2311)
2. 신혼부부 생애 최초 구입 주택 감면	〈신설〉	○ 신혼부부 생애 최초 구입주택(취득당시 가액 3억원(수도권은 4억원) 이하, 전용면적 60㎡이하)에 대한 감면조항 신설 － 취득세 50% 감면	전라북도 세정과 (280-2315)
3. 위기지역 내 중소기업 감면 신설	〈신설〉	○ 고용위기지역(고용재난지역,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포함) 내 중소기업이 사업전환계획승인을 받은 경우 세제 감면 － 취득세 50%, 재산세 50%	전라북도 세정과 (280-2315)
4. 지방세 세무조사 제도 개선	〈신설〉	○ 세무조사 착수 시, 납세자권리헌장 낭독 ○ 사전통지 생략한 경우, 세무조사통지서 교부 ○ 세무조사 연장사유 신설 ○ 세무조사 중지기간 중 자료제출 요구 금지 ○ 세무조사 결과 통지내용 명확화 ○ 폐업의 경우에도 결과통지 의무화 ○ 납세자 금품제공으로 부실 세무조사 시, 재조사 가능	전라북도 세정과 (280-2749)
5. 종이 수입증지 민원서비스 개선	○ 증지 요금계기 사용 또는 종이 수입증지 구입 납부	○ 종이 수입증지 판매가 중단되고 증지 요금계기 또는 신용카드 단말기 사용 납부 － 단, 경찰청 및 경찰서 총포·화약소지 허가 등 10종은 신용카드 납부만 가능 － 기존에 판매된 종이 수입증지는 환매 가능	전라북도 세정과 (280-2320)

2. 재난안전·소방

구 분	현 행	달라지는 내용	관계 부서(063)
1. 승강기 업종 세분화 및 안전관리 책임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승강기 등록업종 2종 ○ 완전 철거 후 재설치 시에만 부품 재사용 허용 ○ 불법유행 승강기 2년마다 실태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승강기 등록업종 3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품 제조 · 수입업 신설 ○ 승강기 부품 안전인증제도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정인증센터에서 3년마다 안전인증 ○ 승강기 관리주체 안전관리 책임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고배상책임보험 의무 가입 ○ 노후 승강기에 대한 관리주체 부담 경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체가 곤란한 부품 재사용 허용 ○ 정부의 안전관리 책임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불법유행 승강기 및 승강기 업종 실태조사 매년 실시 	전라북도 안전정책관 (280-2782)
2.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제 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진 안전표시제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대상이 공공건축물에서 민간건축물까지 확대 	전라북도 자연재난과 (280-4381)
3. 폭염 · 한파로 인한 피해 자연재난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폭염 · 한파 자연재난 미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폭염 · 한파 자연재난 포함 ○ 폭염 피해자 재난지원금 지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 망 1,000만원 – 부상자 250~500만원(1~14등급별 차등) 	전라북도 자연재난과 (280-2743)
4.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제도 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계획 : 재해영향성검토(규모관계없음) ○ 개발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해영향평가(면적5만㎡이상, 길이10km이상) – 소규모재해영향평가(면적5천㎡~5만㎡미만, 길이2km~10km미만) 	전라북도 자연재난과 (280-2743)
5. 소방시설업 미등록영업 벌칙규정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년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전라북도 방호예방과 (280-3807)
6. 소방시설 위반행위 신고결과 통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방시설 불법행위 신고시 처리결과 통지 의무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방시설 불법행위 신고 수리시 신속처리 후 신고자에게 절차에 따라 통지 	전라북도 방호예방과 (280-3807)
7. 다중이용업소 허가관청의 확인사항 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중이용업주 변경 또는 지위승계시 화재배상책임 보험가입만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중이용업주 변경 또는 지위승계시 화재배상책임보험가입과 소방안전교육 이수 확인 	전라북도 방호예방과 (280-3807)

구 분	현 행	달라지는 내용	관계 부서(063)
8. 다중이용업소 화재위험평가 대행자 등록기준 변경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등록 취소된 후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등록제한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등록 취소된 후 결격사유 소멸시 즉시 가능	전라북도 방호예방과 (280-3807)
9. 긴급구조지원 기관 능력평가 개선	○ 2010년부터 지원기관의 재난대응능력에 대해 매년 1회 평가하였으나, 자료조사 수준의 평가 ○ 평가결과에 따라 지원기관의 개선 의무규정에도 불구하고 개선하지 않는 사례 다수발생	○ 평가기준을 현행 자료조사 수준에서 평가수준으로 개선하고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이 평가 ○ 평가 결과 대국민 공개, 우수기관에 표창수여 등 인센티브 제공 - 평가결과 3개 등급으로 분류(우수30%, 보통60%, 미흡10%), 우수기관 표창 및 대국민 공개('20.1월, '19년 평가 대상) - 미흡기관은 전문가 역량강화 컨설팅 실시('20.2월)	전라북도 구조구급과 (280-3851)
10. 영상통화기능을 활용한 119 신고·접수처리	○ 음성통화로 119신고접수	○ 영상통화를 활용한 119신고 접수처리 - 신속·정확한 현장상황 판단 - 정확한 응급처치 안내로 골든타임 확보	전라북도 119종합상황실 (280-3896)
11. 완주소방서 운영 개시	〈신 설〉	○ 완주소방서 개청 - 완주군 전체의 재난대응 전담 - 10개 소방서 → 11개 소방서	전라북도 소방행정과 (280-3582)

3. 농·축·수산·식품

구 분	현 행	달라지는 내용	관계 부서(063)
1.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 시행	○ 잔류농약허용기준 미설정 농약 → 잠정기준적용	○ 잔류농약허용기준 미설정 농약 → 일률기준(0.01ppm) 적용	전라북도 친환경유통과 (280-2691)
2. 농식품 창업 아카데미 교육과정 시행	〈신 설〉	○ 농식품 창업 아카데미 교육과정 시행 - 도내 농식품 관련 예비창업자 및 3년미만 창업자를 대상으로 창업초기단계, 성장단계별 교육을 통해 창업 초기 진입 리스크를 최소화하여 창업성공률 제고	전라북도 농식품산업과 (280-3262)
3. 전통식품 마케팅 활성화 지원사업 시행	〈신 설〉	○ 전통식품 및 전통주를 직접 제조·판매하는 업체 대상 제품개발, 포장 용기개선, 마케팅 활성화 분야 지원	전라북도 농식품산업과 (280-3676)
4. 종자생명산업 맞춤형 인력양성 사업 시행	〈신 설〉	○ 종자산업 맞춤형 인력양성 교육과정 시행 - 전북 종자기업 맞춤형 인력 양성을 위해 종자기업 인턴십 기회 제공 및 종자산업 분야 현장 실무인력 양성 취업 지원	전라북도 농식품산업과 (280-4632)
5. 2019년도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 개편	① 농촌중심지 활성화(통합, 선도, 일반) - 통합 : 120억원 - 선도 : 80억원 - 일반 : 60억원 ② 마을 만들기(5억원) - 공동복지문화 - 체험소득 - 경관생태 ③ 폐지사업 - 권역단위 종합개발 (40억원) - 시군창의(10억원)	① 농촌중심지활성화 : 150억원 ② 마을 만들기 자율개발사업 (5억) ③ 신규사업 - 농촌다움복원 : 20억원 - 신활력플러스 : 40억원 - 농촌형 공공임대주택 : 23억원	전라북도 농촌활력과 (280-4194)
6. 계란 산란일자 표시 의무화	○ 계란에 산란일자 미표시	○ 2019년 2월 23일부터 계란에 산란일자 표시 의무화	전라북도 동물방역과 (280-2655)
7. 닭, 오리 사육농장 및 부화장 방역 준수사항 강화	〈신 설〉	○ 닭, 오리 및 부화장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설치 의무화	전라북도 동물방역과 (280-4641)

2019년 달라지는 주요제도(요약)

구 분	현 행	달라지는 내용	관계 부서(063)
8. 동물용의약품 취급규칙 강화	〈신 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물용의약품 유통품질관리 기준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물용의약품제조관리자, 안전관리책임자, 동물용의약품도매상의 업무관리자는 1년에 8시간이상 안전교육 - 동물용의약품도매상의 공급 · 품질관리 책임자 지정과 품질관리기준서 작성 · 운용 의무화 	전라북도 동물방역과 (280-4642)
9.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금 인상	○ 1어가당 년 60만원	○ 1어가당 년 65만원	전라북도 해양수산물과 (280-4646)
10. 불법어업 신고포상금 지급액 상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고포상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징역 1년 이상 200만원 - 징역 1년 미만 100만원 - 어업 등 행정처분 10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고포상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징역 1년 이상 300만원 - 징역 1년 미만 200만원 - 어업 등 행정처분 취소 50, 정지 30, 경고 10만원 	전라북도 해양수산물과 (280-4655)
11. 전북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품목 : 7품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파, 마늘, 생강, 건고추, 노지수박, 가을무, 가을배추 ○ 품목결정 : 시군별 2품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품목 : 8품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파, 마늘, 생강, 건고추, 가을무, 가을배추, 노지감자, 대파 ○ 대상품목 결정 : 시 · 군 추천 후 도 위원회 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8개품목(3) : 군산시, 김제시, 장수군 - 5개품목(3) : 익산시, 남원시, 부안군 - 4개품목(5) : 전주시, 정읍시, 완주군, 진안군, 무주군 - 3개품목(3) : 임실군, 순창군, 고창군 	전라북도 친환경유통과 (280-4633)
12. 여성농업인 생생카드 확대 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연령 : 20~70세 ○ 지원단가 : 12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연령 : 20~75세 ○ 지원단가 : 15만원 	전라북도 농업정책과 (280-4154)
13. 농번기 공동급식지원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00개 마을 ○ 6만원/일, 40일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00개 마을 ○ 8만원/일, 40일간 	전라북도 농업정책과 (280-4154)
14. 전라북도 귀농귀촌 상담홍보전 개최	○ 전라북도 귀농귀촌 박람회 개최(연 1회)	○ 귀농귀촌박람회를 수요자 맞춤형 귀농귀촌상담 홍보전으로 변경	전라북도 농촌활력과 (280-4163)

4. 문화·예술·체육

구 분	현 행	달라지는 내용	관계 부서
1. 문화누리카드 8만원으로 상향 지원	○ 1인당 연 지원금 7만원	○ 1인당 연 지원금 8만원	전라북도 문화예술과 (280-3305)
2. 문화기반시설 내 문화예술교육사 배치	〈신 설〉	○ 문화기반시설 9개소 내 문화예술교육사 배치(개소당 1명)	전라북도 문화예술과 (280-4847)
3. 공·사립 작은도서관 운영지원 확대	〈신 설〉	○ 도내 공사립 작은도서관 지원 확대로 지역 커뮤니티 거점공간 및 역할 제고	전라북도 문화예술과 (280-2493)
4. 장애인생활체육 지도자 확대 운영	○ 14개 시·군 20명	○ 14개 시·군 30명	전라북도 체육정책과 (280-3327)

5. 복지·여성·보건

구 분	현 행	달라지는 내용	관계 부서(063)
1. 전북형 기초생활 보장제 실시	〈신 설〉	○ 부양의무자 기준 등으로 생계급여 수급자에서 탈락하는 기준중위소득 30%이하 세대에게 생계급여 지원	전라북도 사회복지과 (280-4767)
2. 자활장려금 지원	〈신 설〉	○ 자활사업에 참여하여 얻은 자활 소득 30%를 자활장려금으로 추가 지급	전라북도 사회복지과 (2804676)
3. 부모부담 차액 보육료 지원액 인상	○ 부모부담 차액보육료 1인당 월 1만원 지원	○ 부모부담 차액보육료 1인당 월 1만5천원 지원	전라북도 사회복지과 (280-2424)
4. 공공형 어린이집 교육환경개선비 지원	〈신 설〉	○ 공공형 어린이집에 교육환경 개선비를 지원하여 보육 품질 향상 - 민간 어린이집 3백만원/연 - 가정 어린이집 2백만원/연	전라북도 사회복지과 (280-4761)
5. 한부모 가족 생활안정 지원	○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 만 13세 미만, 월 12만원 ○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비 - 월 17만원	○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 만 14세 미만, 월 13만원 ○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비 - 월 18만원	전라북도 여성청소년과 (280-2522)

2019년 달라지는 주요제도(요약)

구 분	현 행	달라지는 내용	관계 부서(063)
6. 아이돌봄지원사업 서비스 단가 인상 및 지원시간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지원금 지원대상 - 중위소득 120%이하 ○ 정부지원금 지급시간 - 연 600시간 ○ 서비스 이용단가 - 시간당 7,800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지원금 지원대상 - 중위소득 150%이하 ○ 정부지원금 지급시간 - 연 900시간 ○ 서비스 이용단가 - 시간당 8,400원 	전라북도 여성청소년과 (280-2524)
7. 기초·장애인연금 저소득층 대상 조기 인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초연금(기준연금) · 장애인연금(기초연금) - 단독가구 기준 월 25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초연금) 소득하위 20% 기준연금액 조기인상 (25→30만원) ○ (장애인연금) 중증장애인 중 생계 · 의료급여수급자(소득하위 30%) 대상 기초급여액 조기인상(25→30만원) 	전라북도 노인장애인 복지과 (280-2462, 280-2521)
8. 장애등급제 폐지 및 맞춤형 지원체계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의 의학적 상태에 따라 장애등급 1급~6급 부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을 장애의 정도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아니한 장애인'으로 구분하여 서비스지원 종합조사를 통해 장애인의 서비스 필요도를 평가하여 수급자격과 급여량 결정 	전라북도 노인장애인 복지과 (280-2521)
9. 다문화 이주민플러스센터 운영	〈신 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문화이주민플러스센터 운영 - 다문화가족과 외국인을 대상으로 고용상담, 체류관리, 통역, 상담, 한국어교육 등 원스톱서비스 실시 	전라북도 국제협력과 (280-2815)
10. 치매노인 공공후견사업	〈신 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년후견 지원이 필요한 치매노인(65세 이상 중등도 이상의 치매이면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자, 가족이 없는 경우 등)에 대하여 공공후견제 지원 ○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60세이상)는 법원에서 공공후견인으로 선임된 후 공공후견인으로서 활동 	전라북도 보건의료과 (280-4688)
11. 정신건강복지센터 확대 운영 및 자살예방 심리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11개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13개소(장수, 순창) ○ 전주, 군산, 익산 '자살예방 심리지원팀' 신설 ○ 도내 자살예방 심리지원(치료비, 검사비, 심리상담, 맞춤형 프로그램 등) 실시 	전라북도 보건의료과 (280-2434)

구 분	현 행	달라지는 내용	관계 부서(063)
12. 출산취약지역 임산부 이송 지원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신 24주 이상부터 분만까지 ○ 5회(산전 4, 분만 1)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신 16주 이상부터 분만까지 ○ 9회(산전 8, 분만 1) 	전라북도 보건의료과 (280-4690)
13. 일반건강검진사업 대상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건강검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만19~64세 세대주 - 만40~64세 세대원 - 만66세 이상 세대주 및 세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건강검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만19~64세 세대주 - 만40~64세 세대원 - 만19~39세 세대원 - 만66세 이상 세대주 및 세대원 	전라북도 건강안전과 (280-3507)
14.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사업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금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료급여수급권자, 차상위계층 : 최대 40만원 - 건강보험료 부과금액 하위 30% 이하인 자 : 최대 20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금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료급여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최대 40만원 - 건강보험료 부과금액 하위 50% 이하인 자 최대 20만원 	전라북도 건강안전과 (280-3507)
15. 식품미생물 시험·검사 수수료 인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생세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장균군, 일반세균, 대장균 : 13,000원 - n=5 검사 : 13,000원 ○ 식중독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살모넬라, 장출혈성대장균, 장염비브리오, 황색포도알균, 리스테리아 : 15,000원 - n=5 검사 : 15,000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생세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장균군, 일반세균, 대장균 : 19,900원 - n=5 검사 : 43,600원 ○ 식중독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살모넬라, 장출혈성대장균, 장염비브리오, 황색포도알균, 리스테리아 : 29,000원 - n=5 검사 : 64,900원 	전라북도 보건환경 연구원 (290-5226)
16. 법정감염병 5종 추가 확인진단 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정감염병 80종 중 40종 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정감염병 45종(5종추가) 확대 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정(4종) : 이질아메바 감염증, 람블편모충 감염증, 작은와포자충 감염증, 원포자충 감염증 - 제4군(1종) : 라임병 	전라북도 보건환경 연구원 (290-5331)

6. 환경·녹지

구 분	현 행	달라지는 내용	관계 부서
1. 어린이집에 대한 건축물 석면조사 면적기준 폐지	○ 연면적 430㎡이상	○ 연면적 관계없이 실시	전라북도 환경보전과 (280-3527)
2. 물놀이형 수영시설 신고 대상 확대(민간부분)	○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 관광지 및 관광단지, 도시공원, 체육시설, 어린이놀이시설	○ 공동주택, 대규모점포 등 신고 의무대상 확대	전라북도 물환경관리과 (280-3555)
3. 가축분뇨 전자인계관리 시스템 사용 의무대상 확대	○ 돼지분뇨 및 액비 배출자(허가자), 수집·운반, 처리 또는 살포자	○ 가축분뇨 배출시설 신고자(양돈농가) 사용 의무대상 확대	전라북도 물환경관리과 (280-4458)
4. 액비화 부숙도 기준 적용 확대	○ 허가대상 배출시설 설치자, 재활용신고자 및 가축분뇨 처리업자가 설치한 자원화(액비)시설	○ 신고대상 배출시설 자원화(액비) 시설로 적용 확대	전라북도 물환경관리과 (280-4458)
5. 산지 내 태양광발전시설 억제제를 위한 제도개선	○ 산지전용허가 - 지목변경가능(임야→잡종지) ○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면제 ○ 평균경사도 기준(25도 이하)	○ 산지일시사용허가 대상으로 전환 - 지목변경 금지(임야→잡종지) ○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전액 부과 ○ 평균경사도 기준(15도 이하)	전라북도 산림복지과 (280-3123)
6.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 확대	○ 79개 품목 지원	○ 79개 품목 + 「산림자원법」에 따른 임산물(목재 및 토석 제외) 지원	전라북도 산림복지과 (280-2682)
7. 산림복지소외자에 대한 산림복지 체험 기회 확대	○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 장애인연금 수급자, 차상위계층까지 확대	전라북도 산림복지과 (280-4668)
8. 해외산림인턴 참여자격 완화	○ 산림관련 고등학교 졸업 후 산림관련 업체 2년 이상 종사자 ○ 6개월 근무 기본 (4~8개월) 탄력적 운용	○ 산림관련 고등학교 졸업 후 미취업자 ○ 6개월 근무 기본(4~10개월) 탄력적 운용	전라북도 산림복지과 (280-2663)

구 분	현 행	달라지는 내용	관계 부서
9. 특별관리임산물 포장규격 완화	○ 특별관리 임산물 포장 규격 제한	○ 품질검사 합격증 부착이 가능한 상자·용기에 포함할 수 있도록 완화	전라북도 산림복지과 (280-2667)
10. 자연휴양림 등급제 도입	〈신 설〉	○ 국공립 자연휴양림에 우선 등급제 도입 ○ 사립 자연휴양림은 신청에 의해 등급제 참여 가능	전라북도 산림복지과 (280-4659)
11. 먹는물 수질감시항목 자연방사성물질 라돈 추가 검사	○ 상수도 정수 먹는물 수질 감시항목 27종	○ 먹는물 수질감시항목 28종(라돈추가) - 대상: 상수원수가 지하수인 정수장,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 - 주기: 반기 1회	전라북도 보건환경 연구원 (290-5261)
12. 토양오염물질 신규 지정 등	○ 토양오염물질 21종 ○ 토양오염우려기준 및 대책기준 22종	○ 토양오염물질 24종(3종 추가) - 크롬, 1,2-디클로로에탄, 다이옥신 ○ 토양오염우려기준 및 대책기준 2종 신설 - 크롬, 1,2-디클로로에탄	전라북도 보건환경 연구원 (290-5271)
13. 수질오염물질 지정 등에 관한 지침 추가 시행	○ 폐수배출시설 방류수에 대해 감시항목 검사 시행 - 3개 항목: 총유기탄소, 염소이온, 황산이온	○ 폐수배출시설 방류수에 대해 감시항목 검사 추가 시행 - 6개 항목: 총유기탄소, 염소이온, 황산이온, 과불화합물 3종(PFOS, PFHxS, PFOA)	전라북도 보건환경 연구원 (290-5272)
14.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및 권고기준 변경	○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5항목, 권고기준 5항목	○ 권고기준에서 미세먼지(PM2.5)가 유지기준으로 변경 ○ 유지기준: 민감취약계층 미세먼지(PM10), 폼알데하이드 기준 강화 ○ 권고기준: 이산화질소 기준 변경 및 신축공동주택 라돈 기준 강화	전라북도 보건환경 연구원 (290-5341)

7. 건설·교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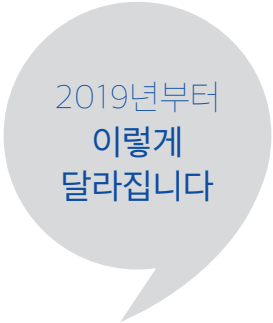
구 분	현 행	달라지는 내용	관계 부서
1. 행복콜서비스(DRT) 확대 시행	○ 7개 시군 21대 운행	○ 2019년 40대 운행 예정 - 전주, 군산, 남원, 완주, 진안, 무주, 장수, 임실	전라북도 교통물류도로과 (280-4447)
2. 도서민 여객선 차량운임 지원 확대	○ 도서민 2,500cc미만 승용자동차 운임 지원률 : 20%	○ 도서민 2,500cc미만 승용자동차 운임 지원률 - 1,000cc 미만 : 50% 지원 - 1,000cc~1,600cc미만 : 30% 지원 - 1,600cc~2,500cc미만 : 20% 지원	전라북도 항만공항하천과 (280-3377)
3. 도시재생 뉴딜 소규모 재생사업 시행	〈신 설〉	○ 지원금액 : 개소당 1억원~4억원 ○ 지원사업 : 지역 공동체가 추진하는 소규모 점 단위 재생사업	전라북도 주택건축과 (280-4499)
4. 전라북도 특별교통수단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	○ 특별교통수단 운영규정 및 배차방법 14개 시·군 제각각 운영	○ 14개 시·군 특별교통수단 운영규정이 통일되고 시군 배차신청을 광역이동지원센터로 일원화	전라북도 교통물류도로과 (280-3621)
5. '희망하우스' 빈집 재생사업	○ 동당 1,200만원 리모델링 비용 지원 ○ 주변 시세 반값 임대(5년)	○ 동당 2,000만원 ○ 무상임대(3~5년)	전라북도 주택건축과 (280-4372)
6. 제설장비 현대화 사업 추진	〈신 설〉	○ 제설장비 현대화로 신속한 제설작업을 실시하여 도민의 안전과 재산 보호 - 2019년 교체 : 덤프2식*, 굴삭기 1대 *덤프1식(15톤덤프1대+제설기1대, 살포기1대)	전라북도 도로관리사업소 (290-6725)
7. 시내버스 공공와이파이 구축	〈신 설〉	○ 도내 시내버스 800대 대상 공공와이파이 설치	전라북도 정보화총괄과 (280-3014)
8.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	○ 정보통신공사업 등록기준 미유지시 영업정지	○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	전라북도 정보화총괄과 (280-3014)

8. 경제·산업

구 분	현 행	달라지는 내용	관계 부서
1. 전라북도 도약기업 육성 지원	〈 신 설 〉	○ 전라북도 도약기업 신규지정 및 지원 - 매출액 10억 ~ 50억원 미만의 도내 중소기업으로, 기업부설연구소(또는 연구전담부서) 보유기업	전라북도 기업지원과 (280-3232)
2. 국방산업 육성 지원사업 지원대상 확대	○ 전주시 소재 중소기업	○ 전라북도 소재 중소기업	전라북도 기업지원과 (280-3228)
3. 수도권 전라북도 우수상품관 개설	○ 도지사인증상품 등 전라북도 우수상품관 3개소 운영	○ 수도권 전라북도 우수상품관 추가 개설로 도내 우수상품의 수도권 판로 확대 지원	전라북도 기업지원과 (280-3224)
4. 전라북도 해외통상거점센터 구축	〈 신 설 〉	○ 해외 주요 거점에 중소기업 원스톱 수출통로 1개소 개설 - 상품전시, 물류창고, 시장조사, 바이어 발굴, 계약 대행 등 지원	전라북도 기업지원과 (280-3225)
5. 2019년 생활임금액 결정 시행	○ 생활임금 조례 제정·시행 - 도, 도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 - 2018년 시급 8,600원 - 월 환산액 1,797,400원	○ 2019년 전라북도 생활임금액 결정·시행 - 도 및 도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 - '19년 시급 9,200원 - 월 환산액 1,922,800원	전라북도 기업지원과 (280-3968)
6. 탄소복합재 공정장비 활용 중소기업 사업화 지원	〈 신 설 〉	○ 도내 연구기관에 구축된 장비 활용 지원으로 도내 탄소기업 활성화 도모	전라북도 탄소산업과 (280-3935)
7. 새만금산업단지 임대용지 사용료 변경	○ 사용료(외투기업 재산가액의 1%, 국내기업 5% 이상)	○ 사용료(외투·국내기업 1% 이상)	전라북도 새만금개발과 (280-2778)

9. 일반행정·법무

구 분	현 행	달라지는 내용	관계 부서
1. 도민평가단 확대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약사업 평가 ○ 위원임기 3개월 한시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약사업 이외에도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의 대규모 사업 포함 평가 ○ 위원임기 2년(1회 연임 가능) 	전라북도 성과관리과 (280-3943)
2. 도 산하 공공기관 직원채용 통합공고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관별 수시채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2회 정기채용 ○ 채용계획 매년 1월과 7월 일괄 공고 ○ 필기시험 의무화 	전라북도 성과관리과 (280-3978)
3. 찾아가는 주민참여 조례개폐청구 협력지원단 운영	〈신 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민의 주민조례청구시 입법과정에서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기 위하여 도 및 시·군, 마을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협력지원단 운영 	전라북도 법무행정과 (280-2143)
4. 전라북도 행정심판위원회 심판청구 국선대리인 운영	〈신 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내 거주하는 사회적·경제적 약자를 대상으로 법률 전문가로 구성된 국선대리인 선임 지원 	전라북도 법무행정과 (280-2136)



2019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2019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